

# 공공경제

www.kipf.re.kr

## 연중기획

### 한국판 뉴딜: 휴먼 뉴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나라를 위한 휴먼 뉴딜  
휴먼 뉴딜을 선도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미래 자산인 청년과 함께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변화와 도약

## 기획특집

### 공공기관 혁신

#### 정책리포트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통한 혁신방안

#### 전문가의 눈 I

공공기관 ESG 경영 도입 및 지속가능성 실현방안

#### 전문가의 눈 II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넘어 윤리리스크 관리로

#### ISSUE&TALK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공공경제』와 함께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는  
“ 공공기관 정책과 사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경제』가 기관과 정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



#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동력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장에는 혁신이 내재화되어 있다. 잘 팔리는 상품으로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라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순간 더는 팔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독점권이 보장되거나 법적 근거에 의해 시장 수요가 보장되기 때문에 개혁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① 시기 ② 주체 ③ 방향 ④ 범위 ⑤ 속도 ⑥ 절차 등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살펴볼 때 1960~70년대에 공기업의 개혁이 산업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공기업 통폐합이 이루어졌다면, 1980년대에는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경제발전의 상황에 따라 공기업이 국민 경제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구조 개혁이라는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는 구조 조정보다 기업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혁신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시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으로 정책적인 노력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학계에서 제시한 이론적인 새로운 접근이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2000년대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관점에서 개방, 경쟁 등을 포함해 시장 원리에 의한 관리 기법이 강조되었다.

한편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의사 결정 구도가 중요하다는 관점의 전환에 따라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면서, 뉴거버넌스(New Public Governance)가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회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New Public Value)가 확산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공급자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개혁의 동력에는 시장에 제공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의미가 제시하는 맥락이며, 혁신을 요구하는 환경이 그러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로 도래한 비대면 시대는 사업 수행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2022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 시 안전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역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할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자발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기득권에 안주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발맞추어 혁신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9년 기존의 알리오 시스템에 더해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을 개통했다. 혁신포털은 현행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서비스 가치를 구현하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이 반영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혁신포털이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및 사업 정보 이외에 개방 시설 정보, 국민참여 행사 정보, 국민소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 성과를 국민의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의 새로운 분위기를 확산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contents



### 권두언

- 03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동력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중기획\_한국판 뉴딜: 휴먼 뉴딜

- 08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나라를 위한 휴먼 뉴딜  
이원주 기획재정부 휴먼뉴딜팀장
- 10 휴먼 뉴딜을 선도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장세인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기획국장
- 12 미래 자산인 청년과 함께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변화와 도약  
장기백 한국장학재단 기획조정팀 차장

### 기획특집\_공공기관 혁신

- 18 정책리포트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통한 혁신방안  
김수영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장
- 21 전문가의 눈 I  
공공기관 ESG 경영 도입 및 지속가능성 실현방안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4 전문가의 눈 II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넘어 윤리리스크 관리로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7 ISSUE&TALK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CEO 인터뷰

- 32 더 건강한 미래,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바로 세웁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 38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공공기관 정책동향

### 44 공공기관 주요 정책동향

## 글로벌리포트

### 48 한국철도! 선진 기술력과 노하우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선관 한국철도공사 해외남북철도사업단장

## 공공혁신 이야기

### 54 5G·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59 우리 아이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시민참여 학교급식 관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공기관 채용정보

### 64 공공기관 잡앤톡(Job&Talk) 예술의전당 / 한국콘텐츠진흥원

### 70 현직자 인터뷰 I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윤정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대리

### 72 현직자 인터뷰 II 준비된 사람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성인 한국석유공사 해외사업2처 유럽사업팀 대리

### 74 나의 취업성공기 I 지역 토박이에서 지역 전문인재로 유수진 창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 인재혁신실 주임

### 76 나의 취업성공기 II 한국남부발전 입사를 향한 걸음걸음 위다운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제1발전소 보일러부 직원

### 80 미디어칼럼 부단한 개선 노력 필요한 공기업 거버넌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이번 공공경제 Vol.07는 어떠셨나요?

『공공경제』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독자분께는 보내주시는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 공공경제

『공공경제』 2021년 Vol.07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인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사업팀장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제작지원	유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최예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자문위원	김동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남궁덕 포항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교수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 바 00032)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 『공공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공공경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전화** (044) 414-2430

**이메일** soe@kipf.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 (1년 정기구독 10,000원)

**납부방법** 온라인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공공경제」에서는 연중기획 주제로 한국판 뉴딜을 다루고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휴먼 뉴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휴먼 뉴딜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를 중심으로 한 세부계획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휴먼 뉴딜을 이행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기관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 지원 등 휴먼 뉴딜에서 강조하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 연중기획 한국판 뉴딜: 휴먼 뉴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나라를 위한 휴먼 뉴딜\_기획재정부

휴먼 뉴딜을 선도하는 한국폴리텍대학\_학교법인한국폴리텍

미래 자산인 청년과 함께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변화와 도약\_한국장학재단

## 01

기획재정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나라를 위한 휴먼 뉴딜이원주  
기획재정부 휴먼뉴딜팀장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다. 1932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장의 삶이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생산을 조절하고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사업을 벌여 많은 실업자를 구제했다. 그러나 뉴딜 정책은 단지 국가 주도의 취로사업이나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 바탕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정하고 실업임금 정책 등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오늘날 미국 사회복지체계의 근간을 마련한 「와그너법」과 「사회보장법」의 제정이다. 「와그너법」으로 노동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보장법」으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은퇴 후 이를 연금과 수당으로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7월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담대한 구상인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 대전환 계획을 출발시켰다. 성장 경로 회복과 구조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IMF 등 대외적으

로도 시의적절하고 제대로 설계된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추진되었다. 그중 안전망 강화는 지난해 12월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부터 7월 모든 학생의 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까지 이어졌고, 예산 6조 6천억원 또한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다. 성과도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소득과약체계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은 정상 궤도를 따라 순항해 왔다.

###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격차를 완화하는 휴먼 뉴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빨라지는 등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다. 이에 따라 뉴딜 계획 자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격차가 점점 커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국의 선도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판 뉴딜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

이해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뉴딜 2.0에서 새로운 축으로 대폭 보강된 '휴먼 뉴딜'은 기존의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투자라는 양대 과제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라는 두 개의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 청년정책: 청년의 맞춤형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

코로나19로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휴먼 뉴딜을 통해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크게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과 청년을 위한 미래 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을 확충하는 고용 확대에 나뉜다.

먼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펀드,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있다.

또한 주거 관련 대출 요건 완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 미래 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을 위해 올해 AI·SW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고용중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IT 기반 창업기업인 지식서비스업종에 부담금을 대폭 완화해 창업을 돕는다.

### 격차해소: 4대 교육 향상 패키지 도입,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학습결손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초학력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인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소규모 튜터링과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과 보충학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성 향상 등을 돕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가정환경별 돌봄격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부모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아동 돌봄 등을 추진하는 '1+4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해 추진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휴먼 뉴딜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확대를 위해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1만 5천명의 예술인에게 하반기 내에 창작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 사회로의 대전환, 휴먼 뉴딜

판타지 소설 해리 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 조앤 K. 롤링은 영국 복지제도의 수혜자였다. 1993년 남편과 이혼하고 생후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정착한다. 28세에 싱글맘이 된 그녀는 일자리조차 없는 궁핍한 상황에서 1년여 간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받아 아이를 키웠다. 그 와중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교사 자격 인증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컴퓨터가 없어 낡은 타자기로 원고를 써 내려가면서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완성했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적 80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5억부 이상 판매됐다. 결국 롤링에게 지급된 주당 70파운드(한화 약 11만원)의 생활보조금은 영국에 수백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돌아온 투자가 된 것이다. 1년 전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 대전환의 문을 열고 쉽 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며, 누구라도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국가를 향해 앞으로 새롭게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02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휴먼 뉴딜을 선도하는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의 사람투자, AI + x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세인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기획국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산업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 간 경쟁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현재 및 미래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에게는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가속화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람투자 10대 과제’(2019. 4.)를 발표했다.

사람투자는 인적자본을 보유한 개인이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체계를 혁신해 생애 전 주기에 따른 능력개발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변화에 낙오되지 않도록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10대 핵심과제로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은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성과 창출 및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교육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서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 신산업 분야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그동안 폴리텍은 뿌리·기간 등 전통산업 중심의 학과 운영으로 2018년 신산업·신기술 분야 학과가 전체 245개 학과의

11%에 해당하는 18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유사 중복 학과를 통폐합(2018~2021년 35개 학과)하고, 산업수요 분석 결과를 반영해 IoT와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예산 등 역량을 집중해 전체 학과 중 신산업·신기술 분야 학과를 25%(61개 학과)까지 확대했으며, 이와 연계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수준 직업훈련인 하이테크 과정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캠퍼스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스템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K-반도체클러스터(경기 용인) 인근 안성캠퍼스를 개편해 반도체융합캠퍼스로 출범했다(2020. 1.). 더불어 성남·청주·아산캠퍼스에 반도체 관련 학과와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을 매년 500명가량 양성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AI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70%가 AI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산업의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해 기존 산업에 AI를 융합한 ‘AI+x’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폴리텍은 기존 산업과

AI를 융합한 'AI+x학과'를 신설해 신속한 인력 양성으로 디지털 혁신 선도 및 산업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고, 전 과정에 AI+x친화과정(소양교육)을 도입해 생애 전주기 AI+x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부터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해 AI·SW, 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 15개 학과를 매년 신설 개편하고, 관련 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해 산업현장에 적기 공급할 예정이다.

### 공정 전(全) 단계 융합형 실습장인 러닝팩토리 구축

기존의 폴리텍 실습장은 학과별로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고, 대형 장비 중심의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 단일공정 반복 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산업 변화에 대응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산업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제품의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공정 전 단계 통합 실습이 가능한 러닝팩토리 실습장을 2018년 시범 구축했다. 그리고 2021년까지 59개소(누적)를 구축해 재학생은 물론이고 고교 진로 체험,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훈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러닝팩토리 개방은 2021년 행정안전부 '협업이음터 중점과

제'에 선정됐다. 또한 외부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러닝팩토리 VR투어시스템 및 예약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역사회와 산업과의 밀접한 연계로 취업률 제고 및 예비 창업자 혁신창의 거점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 구축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해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기업은 생산성(30%↑)과 납기준수율(15.5%↑) 등이 향상되고, 불량률(43.5%↓)과 원가(15.9%↓)와 산업재해율(22%↓) 등이 감소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공장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 10개 지정,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폴리텍은 스마트산단 지정과 연계해 산단 인근 캠퍼스에 인프라를 구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4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기초·중간 단계(2년제 학위, 전문기술 과정) 인력양성 및 스마트공장 전환 기업의 재직자 대상 맞춤형 직무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 추가로 6개소 구축을 완료해, 2022년부터 10개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에서 매년 2천명 이상의 교육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람투자는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우선 투자하는 정책이다. 폴리텍은 국민 누구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산업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수요 분석에 기반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개인의 역량 제고와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표〉 기존 실습장과 러닝팩토리형 실습장 비교

구분	기존 실습장	러닝팩토리 실습장
형태	대형 장비 중심(CNC 머시닝, 5축 가공기 등)	공정단계별 훈련 장비 통합 운영
용도	직업훈련 실습	실험·실습, 연구과제·신제품 개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훈련 직종	단일 직종	융합형 직종
실습 형태	단일 공정 실습	생산 전 공정 통합 실습
시제품 생산	불가	가능

[그림] 융·복합형 바이오 분야 러닝팩토리 개념도



## 03

## 한국장학재단

미래 자산인 청년과 함께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변화와 도약

장기백  
한국장학재단 기획조정팀 차장

정부는 올해 7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청년 및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일자리 연계, 대학생의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재단은 자체적으로 30개의 한국판 뉴딜 관련 추진 과제를 발굴했으며,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와 더불어 이번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서 확대된 휴먼 뉴딜의 '청년정책'과 '격차해소' 과제 수행을 위해 재단은 핵심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과 관련해 재단이 새롭게 개편을 준비 중인 사업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 있다. 아울러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형 기숙사' 또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청년층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연간 100만명 이상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 도입되었다. 2012년 1조 7,500억원 규모로 시작한 국가장학금은 지속적인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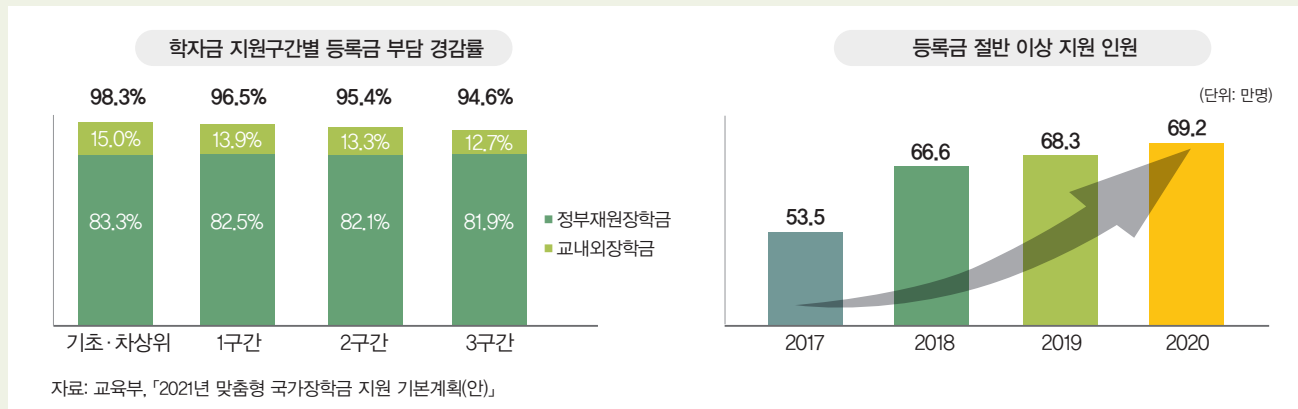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약 3조 5천억원을 포함해 정부와

〈표 1〉 청년 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주요 사업 개요(2021년 기준)

구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창업지원형 기숙사
지원대상	대학생	대학생	중·고·대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개요	대학생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소득·재산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장학제도 <sup>1)</sup>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대출제도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발굴해 지원할 때(대학 단계)까지 지원하는 장학제도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에 전념하도록 양질의 주거 및 창업준비 공간 무상지원

주: 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기준 설명

[그림 1] 학자금 지원구간별 등록금 부담 경감률 및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인원



대학의 공동 노력으로 총 6조 5천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학자금 지원구간 중 3구간 이하인 저소득층의 등록금 경감률이 약 96% 수준이며,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인원이 약 69만 2천명에 도달하게 되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완화 체감도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층을 더욱 두텁게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단가를 기존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700만원(둘째부터는 전액 지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세분화했던 학자금 지원구간 5~8구간의 지원단가도 상향해 4~6구간은 연간 390만원, 7~8구간은

연간 35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단 설립 이듬해인 2010년에 도입됐다. 이는 취업한 이후 학자금대출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신용유의자가 발생

[표 2] 2022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확대 계획(예정)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21	I 유형		520			390	368		120	67.5
	다자녀		520					450		

구분		서열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22	I 유형	첫째	700	520			390			350	
		둘째	전액								
	다자녀	첫째	700	520			450				
		둘째	전액								
		셋째 이상									

※ 2022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표 3〉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2016~2021년)

(단위: %)

2016		2017		2018~2019		2020		2021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2.7	2.5	2.25	2.25	2.2	2.2	2.0	1.85	1.7	1.7

하지 않고,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이 없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2년 국가장학금이 도입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학자금대출 제도의 수혜자 수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와 자격요건 완화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보완하는 교육금융 제도로서 여전히 학자금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지원대상이 학부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sup>1)</sup>을 내야 하는 대학원생 지원에 미흡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이에 재단은 개선요청 의견을 수용해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6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학원생」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2년부터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2022년도에는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 대학원부터 적용

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의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 자격요건 완화(성적 기준 폐지 등),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재학 중 발생 이자 면제, 파산자 면책 허용 등을 2022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청년층의 대출 부담 상환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선발 인원 2배 증원

재단은 저소득층 가계의 학생들에게 매월 장학금(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대학생 45만원)과 교육프로그램(멘토링, 진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신규 장학생 선발 인원을 기존 매년 1천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희망사다리 제공’이라는 정책적 방향 아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지원을 통해 계층이동 가능성을 키워주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그림 2〉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개요



1) 2020년 등록금 평균: (학부) 연간 673만원 수준 / (대학원) 연간 883만원 수준

[그림 3] 5개 권역 창업지원형 기숙사 소재지 및 주요 지원내용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그간의 대학생 중심 국가 장학사업 체계를 탈피하고,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개시되어 202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승인(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되었으며, 학자금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재단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추진되는 국가 장학사업 수혜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과 '사회적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창업지원형 기숙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

휴먼 뉴딜과 더불어 재단은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형 기숙사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창업지원형 기숙사는 2019년 10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권역 개소를 시작으로 창업 준비 대학(원)생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무상으로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왔다.

이는 단순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기존 기숙사 역할을 넘어, 청년창업의 접근성 강화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향후 지역별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추가 발굴과 협력 인프라 확대를 통해 창업지

원형 기숙사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들과 창업 전문가를 매칭하는 맞춤형 자문교육을 강화하고, 입주생 우수성과를 언론에 보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청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계속

재단은 설림 이래로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수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민감도가 높은 주 고객층인 학생들의 특성 등을 고려해 비대면서비스 개선 및 확대, 학자금서비스 개편 등 디지털 뉴딜 중심의 성과 창출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더욱 폭넓고 편리하게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재단은 청년들의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디지털 뉴딜 중심의 한국판 뉴딜을 견고하게 추진하며, 휴먼 뉴딜의 적극적 수행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재단의 이러한 변화와 도약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획특집>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상세히 다룬다. 먼저 '정책리포트'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기관 윤리경영과 이를 통한 혁신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서 '전문가의 눈'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을 위한 ESG 경영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넘어 윤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ISSUE&TALK'에서는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와 한계점을 알아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기획특집 공공기관 혁신

- |            |  |
|------------|--|
| 정책리포트      | ■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통한 혁신방안                                       |
| 전문가의 눈     | ■ 공공기관 ESG 경영 도입 및 지속가능성 실현방안<br>■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넘어 윤리리스크 관리로 |
| ISSUE&TALK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 공공기관 윤리경영을 통한 혁신방안



김수영  
기획재정부 윤리경영과장

기업 임직원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로 기업 이미지 저해, 불매운동 등이 유발되고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남양유업 본사 직원의 대리점 갑질로 촉발된 불매운동 등 국내외를 불문하고 윤리경영 실패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주시해 임직원의 준법경영 지원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강조하는 경영원칙을 세우는 등 전통적인 재무리스크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윤리경영을 포괄하는 '조직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현직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토지개발, 공공주택 분양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직접 수행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부패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공공기관 윤리경영 혁신의 중요성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을 받아 직접 정책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가 부여한 우월적이고 때로는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여러 필수재와 공공 서비스 등을 공급하기도 한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더욱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강원랜드 등 몇몇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 등의 도덕적 해이 행위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설치해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공공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기재부 장관 및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감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윤리경영을 저해한 임원의 해임 근거와 인사감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통제장치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2018년부터는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 배점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 LH 사태를 비롯해 마사회 회장의 특혜 채용 지시, 부동산원 상임감사의 특정 회사 계약 지시 등 윤리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면서 공공기관 윤리경영의 근간에서부터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간 공공기관의 윤리경영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가 마련되었음에도 임직원 개개인의 의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윤리문화 정착 노력이 수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공기관 공직윤리 저해 사례를 개인의 단순한 일탈 행위로 대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공공기관 공직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윤리경영 혁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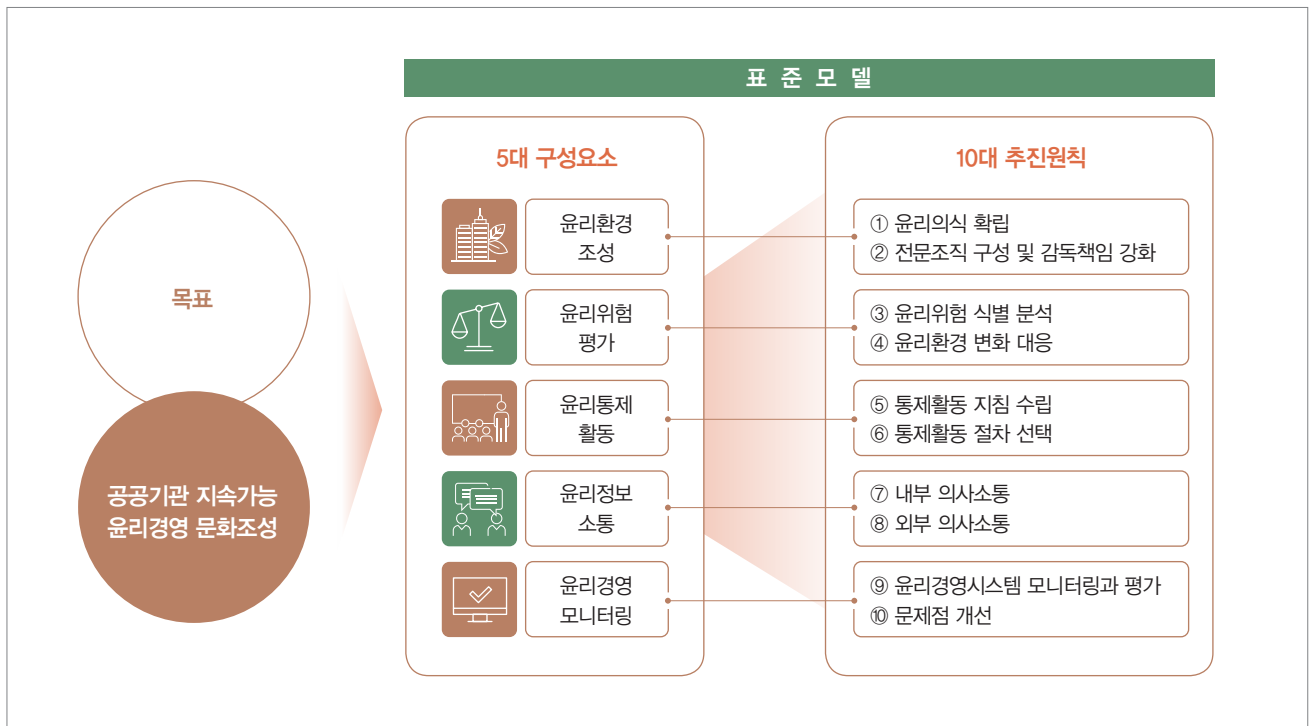
### 공공기관 윤리경영 혁신방안

첫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배점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부터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또한 평가지표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에 비해 배점이 크지 않고,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기본점수를 획득해 종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기관장과 임원의 사후책임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윤리경영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세부평가 내용에 이해충돌 방지

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도덕적 해이 및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지표를 '0점' 처리해 종합등급에 영향을 끼치게 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인사 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사후적 책임성을 두텁게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공공기관 중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마다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정도가 경미한 곳들이 있어 공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사회적 책임 등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월에 비위행위로 중징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할 근거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8월에는 공공기관 직원의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그림]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체계도



## 기획특집

### 공공기관 혁신

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징계제도를 정비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공공기관별로 현행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징계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각 부처에서는 공공부문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대응해왔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자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 일반감사, 일상감사, 특정감사 등을 수행해 그 실적을 제출하게 하고, 매년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게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도평가 등을 시행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 및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윤리경영과 관련된 외부의 평가 등 법과 제도는 성숙해지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공공기관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 COSO\* 기준에 따라 윤리환경조성, 윤리위험평가, 윤리통제활동, 윤리정보소통, 윤리경영 모니터링 등 5대 구성 요소에 대해 각 2개씩의 추진원칙과 이에 따른 세부 중점 고

려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준법 모니터링 시스템의 주체와 권한, 내부성과평가 환류방안 등을 비롯해 직원 개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양식까지, 다양한 차원의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이 표준모델을 참고해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윤리경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개선계획 등을 마련해 실행하게 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윤리경영 혁신과 국민 신뢰 제고 기대

2021년 현재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각 공공기관의 사업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직원들은 예상 밖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법과 제도가 미처 규정하지 못해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결국 공공기관마다 윤리문화가 정착되고 직원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수반될 때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윤리경영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 등 여러 신호(signal)를 보내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도록 하는 등 윤리경영문화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효과적인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 등 5개 기관이 공동 설립한 단체



전문가의 눈 |

## 공공기관 ESG 경영 도입 및 지속가능성 실현방안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공공기관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이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이란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통한 존속을 뜻한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가치 추구가 탁월한 경영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연결되어 선순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지속가능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26일 정부는 공공기관 ESG 경영 선도를 위해 경영공시에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에 녹색제품 구매, 온실가스 감축,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등이 추가되었는데, 2022년 이후에는 예를 들어 물·에너지 사용량,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 코스피 상장 여부 및 기업규모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상장공기업 등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ESG 공시, 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공공기관 경영에서 효율성 제고에만 주력했던 현장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인 공익성과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인 ESG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목적을 설정해 경영관리를 행하며, 나아가 그 성과를 보고 및 공시해 평가받는 ESG 경영의 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ESG 경영이 잘 정착하고 더불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 전반의 혁신 및 구성원이 함께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가 추상적이고 이해도 역시 아직 낮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방법론인 ESG를 연계해 국정 운영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본계획과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에 포함할 수 있는 지표들을 도출하는 데 ESG 보고기준과 평가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ESG 경영을 도입을 위한 국제적 기준

우선 사회적 가치와 ESG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익을 추구하는 사명과 설립목적의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즉 ESG 경영의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ESG 경영에서 활용되는 글로벌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26000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하고 활용하면서 공공부문에 맞는 기획, 실행, 평가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별 공공기관들의 특성과 주요 본업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는 ESG 공시 기준인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표준을 반영해 ESG 보고 및 공시를 시행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 SASB 표준의 큰 특징은 바로 산업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산업별로 중요한 ESG 이슈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시행해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 산업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의 본질에 따라 중요한 ESG 이슈들이 다를 수 있다. 동일한 잣대로 모든 산업의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대성 평가를 통해 더 효과적인 ESG 경영을 펼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성 평가에는 산업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집단들도 참여시키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핵심 틀인 GRI 기준은 물론이고, ESG 경영에서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요

구 조사와 중대성 평가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집단의 의견 수렴을 구조화해야 하며,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개편이 필요하다.

ESG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뒤에는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포용성장 등 사회적 가치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들은 ESG 경영을 추구할 때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조사하고, 산업별 중대성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들도 업종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동질성과 이질성이 있다는 점과 그러한 요구 파악 및 중대성 평가 등에 산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공기업과 연기금이다. 8월 26일 정부에서는 기금운용평가 및 연기금 투자플 운영사 선정 평가에 ESG 항목을 확대·신설하고,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책금융 지원 시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지속가능 연계대출 상품 도입을 검토하는 등 ESG 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는 금융업종 공공기관들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업은 자본의 조달, 운영을 통해 혁신을 이끌 수 있는데, 금융 관련 공공기관들에 ESG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를 동시에 창출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각기 해당 업종에서 증시되는 ESG 요인을 파악해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기관 ESG 경영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이제 구체적으로 ESG 경영 도입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자. 먼저 ESG 측정 및 평가체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글로벌 기준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체계적인 지식과 이론을 기반으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학계 전문가들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및 ESG 관련 업무, 사회적 경제 관련자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최근 동향과 모범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각 공공기관 내부의 현 ESG 경영 상황과 수준을 진단해야 한다.

둘째, 각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 등에 따라 ESG 어젠다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공공기관별로 중대성 평가를 기반으로 우선순위에 둘 ESG 이슈들을 선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예산, 그리고 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ESG 경영의 실천은 단순히 과거의 사회공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경영, 나아가 가치사슬

(value chain)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과 인원이 필요하고, 협력사 등과의 협업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로드맵 기획과 검토에는 반드시 임원 수준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며, 최종 실행계획 확정에는 최고경영자의 참여와 주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실행, 역량은 가치를 뺀어 결국 경영성과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ESG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인 열매를 점검하고, 가치치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도구로서 대단히 유용하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가치 경영이 초기 단계여서 정교한 방안들이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때 ESG의 전개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내용 그리고 성과평가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정부혁신, 공공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ESG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ESG 경영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공공기관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얻을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 특화된 ESG 경영을 모색하고 개발해 나감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전문가의 눈 II

#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넘어 윤리리스크 관리로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블랙스완의 등장



1697년 네덜란드 탐험가 윌리엄 드 블라밍(Willem de Vlamingh)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검은색 백조를 발견했다.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는 중세 유럽인들의 통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검은 백조(black swan)’ 개념은 과거 경험을 통해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충격을 안겨주는 일련의 사건들을 상징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9·11 사태, 동일본 대지진,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올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을 블랙스완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많은 관행과 관습 중에는 과거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발견되지 않다가, 일단 한 번 드러나면 국민적 공분(公憤)으로 이어질 수 있는 블랙스완이 존재한다. 과거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국가기밀 유출 사건, 채용비리 사건,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생각해 보자.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존재했지만 어느 순간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부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20여 년간의 노력

윤리경영 개념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1950년대에 등장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는 글로벌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IMF 관리체계의 등장과 함께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00년대 초 국내에 윤리경영체계가 확산될 때 던져진 기본적인 질문은 세 가지였다. 윤리강령이 있는가? 윤리 전담조직이 있는가? 윤리 전담인력이 있는가? 20여년이 지난 지금 윤리강령(규범)과 윤리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지 않은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에 관심이 없거나 윤리경영체계를 갖추지 않은 공공기관 역시 거의 없다. 실제로 매년 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통해 기관의 청렴도 노력과 성과가 측정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윤리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 공공기관들은 어떤 답을 할까?

- ☑ 최고경영자는 기관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윤리경영체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
- ☑ 윤리경영 전략을 구축하고, 관련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가?
- ☑ 윤리경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
- ☑ 윤리경영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가?

이 질문에 공공기관들은 저마다 윤리경영체계를 갖추고 있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윤리경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할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준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공공기관은 이미 윤리경영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윤리경영체계를 갖추고 윤리경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윤리리스크 관리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2021년 6월에 1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관 모두 윤리경영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윤리규범 및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경영 핵심성과지표(KPI)를 관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조사대상 기업 모두 윤리경영체계를 갖추고 나름대로 윤리경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윤리경영의 내재화 및 윤리문화 형성 같은 문제는 별개다. 중요한 것은 많은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블랙스완과 같은 윤리리스크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윤리리스크 발굴

많은 공공기관에서 윤리경영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윤리리스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례<sup>1)</sup>처럼 이어져 내려온 윤리경영 방식과 체계 개선만으로 윤리리스크를 막아낼 수 있을까? 시대적인 인식 변화와 정치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리스크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왜 공공기관에서의 윤리리스크 발생이 반복될까? 만약 좀 더 적극적으로 윤리리스크 대응에 노력

을 기울였다면 해당 기관은 그러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점들을 검토해보면, 블랙스완처럼 한 번 발생했을 때 조직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윤리리스크에 대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윤리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그 경험을 학습의 기회이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우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윤리리스크 관리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의 윤리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내재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기관 특유의 윤리리스크를 목록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는 것이다.

윤리경영체계의 강화 및 내재화를 위해 기관장은 윤리경영을 기관의 경영철학으로 정하고, 이에 관해 직원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윤리경영을 독립적인 기능으로 전략화해 윤리경영 프로그램 및 과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윤리경영 전담부서는 현장 직원과 관리자들의 윤리적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중간관리자 대상 윤리적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문화의 윤리성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 윤리리스크 관리방안

기관의 모든 부패와 비윤리 관행 및 이슈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은 아니다. 어느 개인의 음주운전이나 적은 금액의 회계오류 사건은 기관 내부에서 해당 개인을 엄격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기존 감사 및 윤리경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윤리경영 이외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윤리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기관에서는 다음을 고려해 윤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기관 특유의 윤리리스크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목록화해야 한다. 기존에 윤리경영체계 영역에서

1) 윤리(ethics)의 어원은 그리스어 'ethos'이며, 이는 관습(customary)이라는 의미가 있다.

## 기획특집

### 공공기관 혁신

모니터링했던 파급력이 큰 윤리 이슈 일부와 현재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이슈를 포함해 목록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은퇴한 직원들에게 지나친 전관예우의 특혜가 제공되지는 않는가? 공공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직원들이 사적 이익에 활용하지는 않는가? 현직 혹은 은퇴한 직원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외에 유출하지는 않는가? 어떠한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고 국민적 관심 사항이 되었을 때 기관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목록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윤리리스크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시각이 필요하다. 비판을 위한 비판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역할, 곧 악마의 지원자(devil's advocate)가 있어야 한다. 내부 혹은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 악마의 지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윤리리스크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를 예측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윤리리스크를 발굴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관의 기획부서 업무에 미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윤리

리스크를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윤리리스크 목록이 작성되면 세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윤리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개선조치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윤리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윤리리스크가 발생하면 사전에 마련된 시나리오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대응이 종료된 이후에는 윤리리스크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실패 기록, 매뉴얼에 반영, 시스템 및 문화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덕성 문제가 발견되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이후 사라진 민간기업 중 윤리리스크가 원인인 사례가 수없이 많다.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기준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윤리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 일자

2021년 8월 19일(목)

■ 장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회의실

■ 사회

민경률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위원

■ 토론자

김우영(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윤영모(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박창범(한국자산관리공사 일자리창출부 부장)  
 채우석(국민연금공단 제도지역발전부 부장)  
 김진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산업육성팀 차장)

■ 정리

최예나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ISSUE&TALK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편집자 주).



**민경률(사회자)** 2019년 말 기준으로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와 기관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성과 및 한계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공기관의 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친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느끼시는 성과와 실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우영** 2019년에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고, 2021년 기준 50.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취업자 수 역시 수도권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 50.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적인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 고용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의 한계점 중 하나는 수도권이 아닌 주변 지역 인구와 기업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혁신도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기업 등의 인프라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함께 이전하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윤영모**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긍정적인 지역발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혁신도시 인구가 20만 명(2019년 기준)을 돌파하면서 지방의 인구 성장에 기여한 한편, 입주 기업도 1,663개사(2020년 기준)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증가율은 수도권 및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및 기업, 일자리 증가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혁신도시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 상호 간의 지식 공유, 교류 및 협력 등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박창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캠코)가 이전한 부산 남구의 경우 63층의 큰 건물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서 작게는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크게는 인근 지역의 재개발 등에 따른 도시재생 효과가 상당히 보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인구 감소가 다소 완화되었고, 지방 세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지역의 청년인재를 위한 좋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혁신도시별로 특성을 갖춰 동일 업종의 공공기관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혁신도시 정착이 완료된 현재는 지역과 공공기관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우석**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공단과 이주 직원의 지방세 납부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수입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파급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서의 소비 진작과 지역인재 및 공무직 채용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직접 체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출퇴근 시간 단축에 따른 여유시간 확보, 수도권 대비 저렴한 주택 구매에 따른 주거 안정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가생활 차원에서 한옥마을을 자주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직원의 지방 근무 기피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 문화시설 부족과 열악한 교육 및 교통 환경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JDC)는 2005년에 본사를 서울에서 제주로 이전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제주도 지역내총생산(GRDP) 및 인구 증가, 유망기업 이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JDC의 첫 번째 핵심 프로젝트

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카카오 등 200여 개의 우수 기업이 입주해 제주 지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제주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조성된 제주혁신도시는 9개 공공기관이 2018년에 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정주 여건에서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률** 혁신도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기반을 조성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 10대 협업과제 중 각 기관에서 수행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사업 사례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창범** 캠코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공동 지원 기금인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을 출범했습니다. 또한 돌봄 기반의 '올밤도서관'을 설립해 이전 기관 종사자와 지역주민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금융·해양·영상 등의 부산지역 특화 산업과 AI·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미활용 국유지에 청년 주거시설과 공공청사·민간 업무시설 등 민관복합기능을 가진 '나라킴 온타워'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청년층 주거 부담을 적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채우석**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전북은 제3의 금융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현재 금융인프라를 마련하고자 사무공간인 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 등을 건립하는 금융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금융인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공단은 금융기관 집적화와 금융인재 육성을 통해 지자체의 금융도시 조성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1, 2위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SSBT)'과 '뉴욕

멜론 은행(The Bank of New York Mellon Corporation, BNY Mellon)' 등 8개 금융기관의 이전을 지원했고,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금융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센터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와 협업 중입니다.



**김진호** JDC는 올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으로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솔루션을 발굴하고, 체험단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가는 생활 속의 실험실을 말합니다. 현재 혁신도시 근로자와 주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거점으로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합니다. 올 10월부터 자율주행 셔틀 운행, 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등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종사자들의 차량 구매율과 유지비용을 낮추고, 주차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연간 2만여 명의 교육·연수생들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해 인근 관광지와 시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민경률**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며 근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우영** 재택근무나 화상회의가 가능한 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습니다. 아담스 프라슬(Adams-Prassl)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경영이나 전문직은 재택근무 비중이 높고, 서비스직은 재택근무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대부분 전문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로 회의나 출장을 가는 빈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재택근무, 화상회의가 더 활성화된다면 어디서 일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주 역시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창범** 코로나19로 근무 환경이 비대면으로 변화하면서 직장이 밀집된 수도권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수반되는 기타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획특집

### 공공기관 혁신

다만, 비용적인 절감 요인 외에도 실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각 기관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시스템 지원 등 여러 가지 여건 또한 마련되어야 비대면 근무 환경의 증가가 실질적인 지방의 인구 유입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제주에서도 공간적 제약이 줄어들고 온라인 회의가 증가하면서 근로자들

들이 지역 내에 정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제주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여행지로써 제주를 찾았다면, 이제는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일과 휴식이 동시에 가능하고 여가에 유리한 제주도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주기업 대부분이 IT 기업인데, 이들은 현재 재택근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넓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제는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사무공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인프라와 자본이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환경 변화가 지역균형발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의 경우 국제행사, 채용, 회의 등 대외업무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월 800~900여명(연간 약 1만명)에 달하던 국내외 투자자의 기금운용본부(전주) 방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대면 회의 등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으나, 해외 투자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또한 내부 직원의 재택근무 시행으로 사무실 내 인원이 제한되어, 예정되어 있던 대형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내 외부인 유입이 줄어들면서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모**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 의사결정 및 지식교류, 교육, 의료, 문화·여가 활동 등은 여전히 오프라인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비즈니스가 확산되면서 ICT산업이 집중해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성장세가 오히려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전통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은 상대적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대학·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 지역혁신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기반 창업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광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을 지방의 경제·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고, 인근 도시와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제·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민경률** 혁신도시 시즌1은 중앙정부 주도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및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을 핵심과제로 삼았습니다. 한편,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될 혁신도시 시즌2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기관 이전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 기업입주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성장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성장거점 육성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기관 담당자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그에 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김우영**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으

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즉, 이전한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이전, 인력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혁신도시 시즌2를 시작할 때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소비를 통해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더욱더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혁신도시를 둘러싼 지방정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며,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윤영도**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 지역기업, 대학,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며, 이전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상호교류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전공공기관은 지역

기업 및 대학과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실습·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박창범**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들과 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령 기관의 수익 일부를 지역 상생 및 협력에 활용한다면 공공기관은 그만큼 지역에 환원할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이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 권한 및 인프라와 결합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혁신도시별로 집중 육성할 산업·분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채우석**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에 필요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시급하고,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연관기업이 이전 또는 지점을 설립할 경우, 계약상의 우대 및 세제 혜택 등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수도권 거점기업에 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새로운 단기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편,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산업을 성장시킬 구체적 비전과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김진호** 지방정부 중심의 성장거점 구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에 따른 부수적인 세수 증대는 지방정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와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업 구조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얻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학력**  
고려대학교 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의학석사  
전북대학교 의학과

**주요 경력**  
2018~현재 국립중앙의료원장  
2018~현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2017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2012 서울의대 의료관리학연구소 연구교수  
2003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

## 국립중앙의료원

# 더 건강한 미래,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바로 세웁니다

• 일자: 2021년 9월 9일(목)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서울) • 대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배근호 소장

국가적 위기 속  
가치를 실현하는 종합의  
보건의료센터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이자 마지막 보루와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되어,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국가 의료대응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는 대규모로 번져가는 바이러스의 차단과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부터 희생되는 국민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료대응이 필요한 국가 보건의료위기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응의 행정 컨트롤타워라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만들고, 대규모로 발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등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지휘하는 체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이후 2017년 2월에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아직 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인적·물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반복되는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중앙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감염병대응체계가 갖춰지면 국가 보건의료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전문성과 역량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책임 있는  
과학적 대응 추진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선 전국의 환자 진료와 의료대응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국민이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해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전문역량이 필요하지만, 그 전문성도 자기 한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 우선순위를 매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98%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다행히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기

존 독감 백신과 달리 효과성이 고령자들에게도 매우 높게 나타나 중증도와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령의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이들을 위한 의료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위기대응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의료대응의 근거를 만들고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국가 감염병 체계 중추 의료기관의 몫이며, 그러한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그동안 우리가 기대해 온 바와 다르게 다양한 변이가 등장하면서 코로나19는 이제 종식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단면역 불가능,  
공존 속 고위험군 방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방역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일상적 작동을 차단해 바이러스를 근절하고 제거하는 목표를 이루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알파, 베타, 델타, 람다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그런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고, 집단면역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차단하고 격리하는 체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아프면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되, 중증으로 치달을 수 있는 고위험군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집중적으로 예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 방위적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렇게 바이러스 뒤만 쫓아서는 온 국민의 생명도, 생업도, 아이들의 미래교육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의료위기 극복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귀결됩니다. 과학적 근거와 엄정한 의학적 평가를 기준으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해 느닷없는 사망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응급 및 중환자 치료체계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방역은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로 차단하고 격리하는 것은 백신을 개발하고 의료자원이 붕괴되지 않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성과가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환자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대응체계도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는 중에 있습니다.

---

### 국립중앙의료원 혼자 그 의료체계를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신뢰받는 리더십으로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 다해야

국가 책임지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체계를 움직이는 주체로서 국가 중추 의료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더십을 갖춘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을지로 6가에 있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니라 기관 개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에 합당한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차원의 실적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부속 공공병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유일한 종합병원, 그 정도의 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을 강화하지는 논의가 좀 더 대담하게 국가 의료전달체계 구축 논의로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립중앙의료원 하나 물리적으로 더 키우거나, 전국에 공공병원 몇 개 더 만드는 것으로 국가 대응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확장된 차원에서 국가 보건의료 거버넌스체계 전환이 필요한 만큼, 그러한 계기를 이번엔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서울 중구 방산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올해에는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기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뜻과 병원의 의도가 합치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코로나19 상황은 국립중앙의료원 60년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연되었던 신축이전 문제가 방산동 옛 미 공병단 부지로 결정되었고,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진하던 중 삼성으로부터 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기부까지 받았습다. 그 과정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이어야 한다는 비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 건립될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을 주목할 것입니다. 방산동 옛 미 공병단 부지, 전통적 안보를 상징하는 곳에 들어설 중앙감염병병원은 현대적 건강안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백신허브로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감염병 팬데믹(세계 대유행) 상황이 보건의료에서 국제협력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한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 제공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계속되는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국민도 국가 책임의 방역과 의료체계, 더 나아가 국제협력의 체계까지 작동해야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 세계 시민의 평화와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안보는 반드시 글로벌 차원의 협력 안보가 되어야 하며, 감염병 대응의 중추가 되는 병원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국제협력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세계



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의료에서 국제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건강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기여가 필요합니다.

---

**그런 점에서 1958년 국립중앙의료원 창립은 국제 건강안보 협력의 역사에서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었죠.**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인류애의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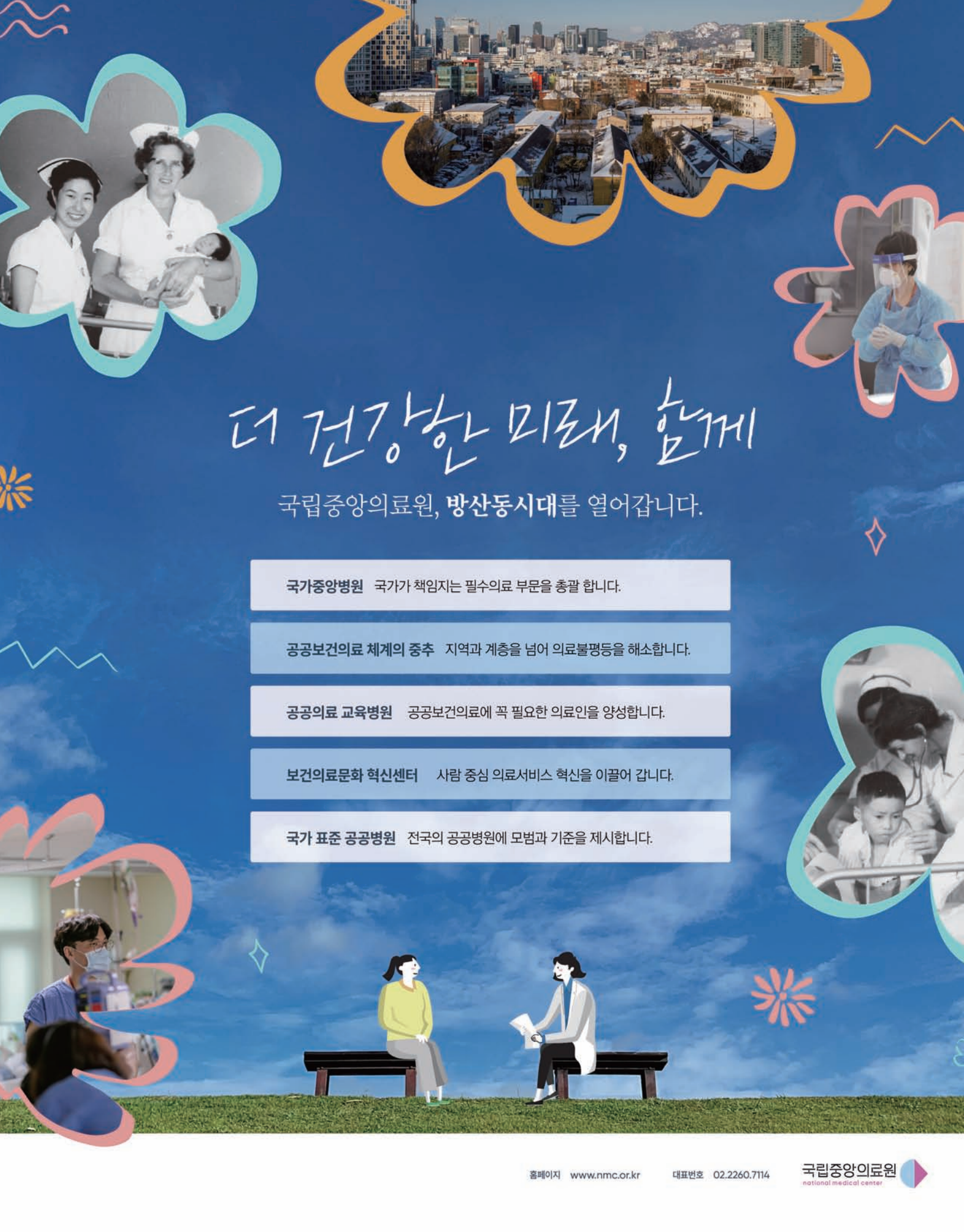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한국전쟁 당시 중립국의 지위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국의 지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정식 국교도 없는 변방의 가난한 나라에 북유럽 3국이 아시아 최대, 최고의 병원을 지어주고, 1968년까지 10년 동안 369명의 의료진을 파견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창립의 역사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의 의료수혜 역사가 아니라, 의료가 어떠한 가치에 뿌리내려야 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인류애의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비전이 선언을 넘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 중심의 병원으로 도약

기관 차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 역사상 가장 엄중한 시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그 존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람 살리는 의료의 근본 가치를 살리고, 의과학적 역량과 공공의 이익을 실천하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핵심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건립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지금 국가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기관을 창립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전제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책임과 자율성, 공공 보건의료체계 운영의 권한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법도 바뀌어야 하고, 보건의료를 둘러싼 수많은 제도를 함께 손봐야 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위한 대기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은 단순히 근사한 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근사한 건물 하나 더 만든다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거나, 음압병상 50개 더 늘린다고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체계입니다. 의료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한민국 감염병 전문역량을 총결집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책임의 의료체계는 공공보건의료기관만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소유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먼저 구체화하고, 이를 민간과 국공립을 망라해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만들어지는 중앙감염병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이 명실상부 의학적 리더십을 갖는 국가중앙병원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항상 한발 앞서 움직이며 국민 모두의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더 건강한 미래,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방산동시대를 열어갑니다.

**국가중앙병원**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부문을 총괄 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중추** 지역과 계층을 넘어 의료불평등을 해소합니다.

**공공의료 교육병원** 공공보건의료에 꼭 필요한 의료인을 양성합니다.

**보건의료문화 혁신센터** 사람 중심 의료서비스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국가 표준 공공병원** 전국의 공공병원에 모범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학력

미국 미시간대학교 환경산업보건 보건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보건 보건학 석사  
서울대학교 농학 학사  
공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주요 경력

2017~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2016 국제산업위생학회 회장  
2015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20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1997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 일자: 2021년 9월 16일(목) • 장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 대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배근호 소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과 주요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전문 공공기관

우리가 일하는 곳은 여러 가지 위험한 설비나 유해한 작업환경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직업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산업재해(이하 산재)라고 합니다.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 기술개발, 교육자료 개발, 사고원인 조사, 위험 기계의 인증 및 검사 등은 개별 사업장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이러한 산재예방 인프라를 확보하고, 사업장에 산재예방 기술 및 재정지원,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산재예방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 이사장님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역임하시고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과 국제산업위생학회 회장을 맡으시는 등 안전 분야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갖춰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김용균 군 사망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여전히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여전히 매년 800명이 넘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경제 수준에 해당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산업안전보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일터의 위험 수준은 2만달러 시대를 지나 3만달러 시대에 이르러 대형화·고도화·집적화·복합화된 반면, 안전인프라는 아직도 1만달러 시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무심했던 우리 사회가 '이제 더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단이 그동안 산재 사고·사망 감소에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패트롤 점검과  
재정지원으로 사고·사망자를  
800명대로 낮추다

우리 공단은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지난 3년 동안 조직, 예산, 사업 등 전 부문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공단은 ‘안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30여년간 수행한 산재예방 사업 방식을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산재예방 사업의 핵심 타깃을 사망사고 예방에 맞추고, 특히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및 제조업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사업추진 방식을 ‘패트롤 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와 제조업의 끼임사고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투자에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제조업 사업장에 시스템 비계,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를 교체하고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1천명 내외로 발생하던 사고사망자를 처음으로 800명대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분야에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궁금합니다.**

민간시장 활성화,  
일자리 박람회, 스타트업  
발굴 등 다양한 활동 펼쳐

우리 공단은 안전보건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교육시장 활성화’, ‘안전보건 잡페어’, ‘스타트업 육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민간교육시장 활성화는 안전보건 교육을 민간시장으로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교육 역량을 높여나감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시행한 안전보건 잡페어는 안전보건 분야에 특화된 구인·구직의 장으로 채용 상담 및 면접,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매칭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년간 총 106개 안전보건기관과 기업이 참여했고, 257명의 안전보건



인재를 채용했으며, 매년 참여기업과 채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3개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금과 판로지원, 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는 매출액 161억 3천만원 달성 및 정규직 2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재예방에 대한 인프라 확대 등이 필요할 텐데, 공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의 커다란 변혁기,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의 커다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서 ‘안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기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안전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동부와 우리 공단의 인력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공단도 안전에 투자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해 예방시설 및 작업환경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대대적인 조직, 예산, 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직과 사업 개편은 개편 그 자체보다, 개편된 조직과 사업이 뿌리를 내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필요한 지원을 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의미와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의 안전수준 높여  
사망사고 32% 줄여,  
민간부문에 확산 기대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소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의 한 축입니다. 매년 공공기관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약 40여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의 안전지표 가중치를 높이고, 법령 위반으로 중대 재해 발생 시 ‘0점’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정부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월에 공공기관 평가지원단을 신설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하고, 안전활동 수준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2019년 128개 기관, 2020년에는 1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공단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간사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사망사고가 약 3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공공기관에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지속·강화해 공공부

문의 안전수준을 높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노동자의 건강문제 등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필수노동자 문제 등 산재예방 취약 부분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건강진단비용 지원,  
위험 메시지 자동 안내 등  
필수노동자 보호 사업 진행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취약 부분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업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취약한 안전보건 환경이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났다고 봅니다.

공단은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지원'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등의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등 근골격계 질환 다발 직종은 '유해요인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휴게 및 샤워시설 설치, 방역 예방 물품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지난해 개발·보급한 '배달 플랫폼 전용 재해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해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 배달 대행 플랫폼 운영사에 보급되었으며, 현재 배달 노동자들이 Open-API(사고다발구역API, 교육영상추천API)를 월평균 약 90만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달 앱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배달 노동자가 사고 다발 구역 접근 시 경고 메시지가 음성으로 송출되고, 당일 기상조건이나 다발재해 등의 위험 메시지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공단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궁금합니다.

청렴은 기본, 전문성과  
소통하는 마음가짐 필요

우리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의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우선 '청렴'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청렴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 덕목입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매사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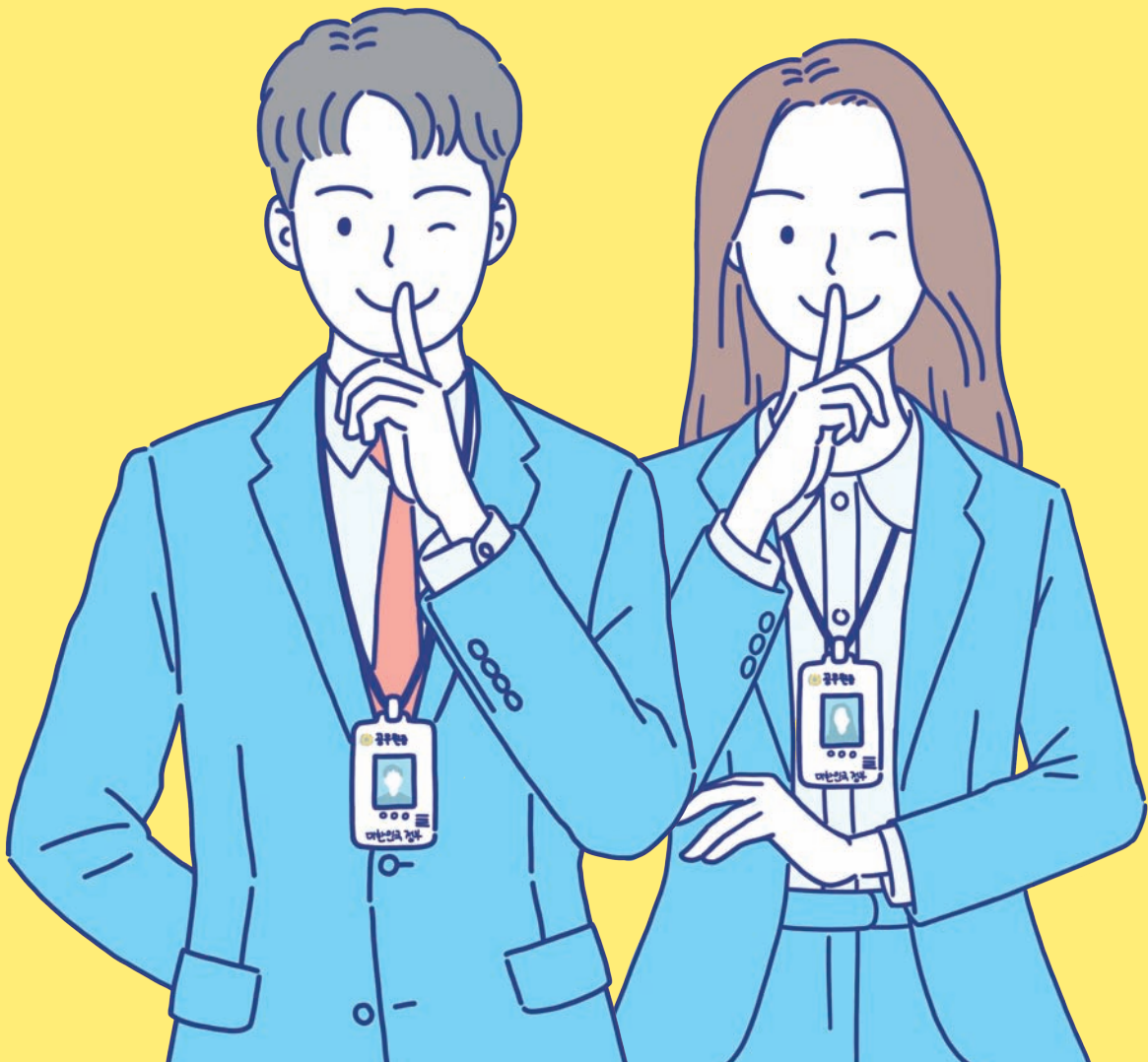
더불어,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원합니다. 최근 안전보건 분야는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집단에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스스로 안전보건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개개인의 역량은 곧 공단의 역량이 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화합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전문기술을 공유하고, 현장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업과 협력은 소통과 화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조직문화 혁신이 온다

“깨어 움직이려는 마음이 문화를 바꿉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향

지난 8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 및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제도개선 민·관 태스크포스(Task Force, 이하 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일반국민·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토론회,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TF 논의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현행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으며, 국민이 신뢰하는 평가제도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 개편 방향 》

- ① 첫째, 현행 한시적 평가단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 평가단은 매년 1년 단위로 구성 및 해체됨에 따라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고, 책임성·안정성 확보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과정의 전산화, 기관 경영실적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분석·연구, 평가정보 축적·관리 등으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② 둘째, 순위·등급 위주의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 결과가 기관의 실질적 경영역량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경영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 경영·사업 실적을 상대 평가함으로써 기관을 서열화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현행 평가는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의 역량 개선에 환류시키는 데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교육 등 역량개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영평가가 기관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③ 셋째, 공공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감하고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고객 중심의 평가'

를 위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윤리·안전·재무성과 등의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평가지표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의 행정부담도 크게 경감시키겠습니다.

- ④ 마지막으로, 새로운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적 컨설팅과 제도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 전담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 《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

지난 8월 26일 정부는 최초로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98개 공공기관 중 2등급(양호)은 8개(8.2%), 3등급(보통)은 57개(58.2%), 4-1등급(주의)은 15개(15.3%), 4-2등급(미흡)은 16개(16.3%), 5등급(매우 미흡)은 2개(2.0%)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안전 취약분야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및 개선 필요과제 이행 등을 통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시범심사를 거쳐 올해 전격 시행됩니다.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는 작업장·건설 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이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활동 수준, 안전성과 등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안전관리 추진사항들도 심사했으며,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상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시행했습니다.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은 심사를 통해 각 기관의 안전관리 취약분야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로 개선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해 개선사항 이행계획을 8월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등 안전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을 일대

〈표〉 공공기관 유형별 심사 결과

(단위: 개, %)

구분	기관 수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5등급 (매우 미흡)
					4-1(주의)	4-2(미흡)	
공기업 <sup>1)</sup>	31	-	5(16.1)	14(45.2)	9(29.0)	3(9.7)	-
준정부기관 <sup>1)</sup>	28	-	2(7.1)	18(64.3)	2(7.1)	5(17.9)	1(3.6)
기타공공기관 <sup>2)</sup>	39	-	1(2.6)	25(64.0)	4(10.3)	8(20.5)	1(2.6)
합계	98	-	8(8.2)	57(58.2)	15(15.3)	16(16.3)	2(2.0)

주: 1) (공기업·준정부기관) 4등급 중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항목 모두 3등급 이상은 '4-1등급(주의)',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4등급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4-2등급(미흡)'으로 분류

2) (기타공공기관) 대부분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안전 전담 부서가 없는 점을 고려해 실험실 내에서 안전수준 항목이 3등급 이상은 '4-1등급(주의)', 4등급 이하는 '4-2등급(미흡)'으로 분류

일 매칭해 개선사항 이행 등을 상시 지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안전 전문기관과 부처 공동으로 이행 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안전관리 미흡 18개 기관이 9월 말에 개선 필요과제를 이행을 완료했으며, 안전관리 주의(4-1등급) 15개 기관은 부처 합동 안전 점검회의에서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전 전담 조직이 없는 출연연구기관에는 관련 전담 조직을 신속히 설치하게 하고, 안전 자격증 소지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게 했습니다. 안전관리 4-2 및 5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또는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등을 올해 말까지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추가로 공공기관의 안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1년 경영평가부터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 안전관리 미흡 18개 공공기관 개선 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 》

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를 공개함과 동시에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선과제를 이행하도록 후속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4-2등급 및 5등급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역량(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등)과 안전수준(작업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 등) 등에서 권고받은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8월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하게 하고, 9월 30일 부처 합동 안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 점검 및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평가 결과, 18개 공공기관 모두 개선 필요과제(안전역량 328개, 안전수준 306개, 안전성과 110개 등 총 744개)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등 안전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을 일대일 매칭해 개선사항 이행 등을 상시 지원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해 신속한 이행을 독려한 조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된 9월 말 점검·평가 이전에 안전능력 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기 점검을 희망하는 5개 기관에 대해 중간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이행 동력이 다른 기관으로 신속하게 확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방향 》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개선사항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안전관리 수준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단계에서 협력사(시공사·하청업체)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능력이 낮은 업체 등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계약특례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발주 공공기관 작업 현장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작업중지 요건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 전체 단계에서 전사적 안전경영체계가 구축되도록 발주자(공공기관)의 모든 부서에서 안전관리와 연계된 내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하고, 안전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자격 취득 지원 및 전문인력 장기 보직을 위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40개 공공기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관련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5년간 기관별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재무 전망이 포함됩니다. 이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등 관련 정책소요를 충분히 반영해 수립했습니다.

동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 규모는 각각 154조원, 89조 3천억원이 증가해 2025년에 1,031조 8천억원, 638조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산 증가(154조원)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입니다.

부채 증가(89조 3천억원)는 이러한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사채 발행과 차입, 사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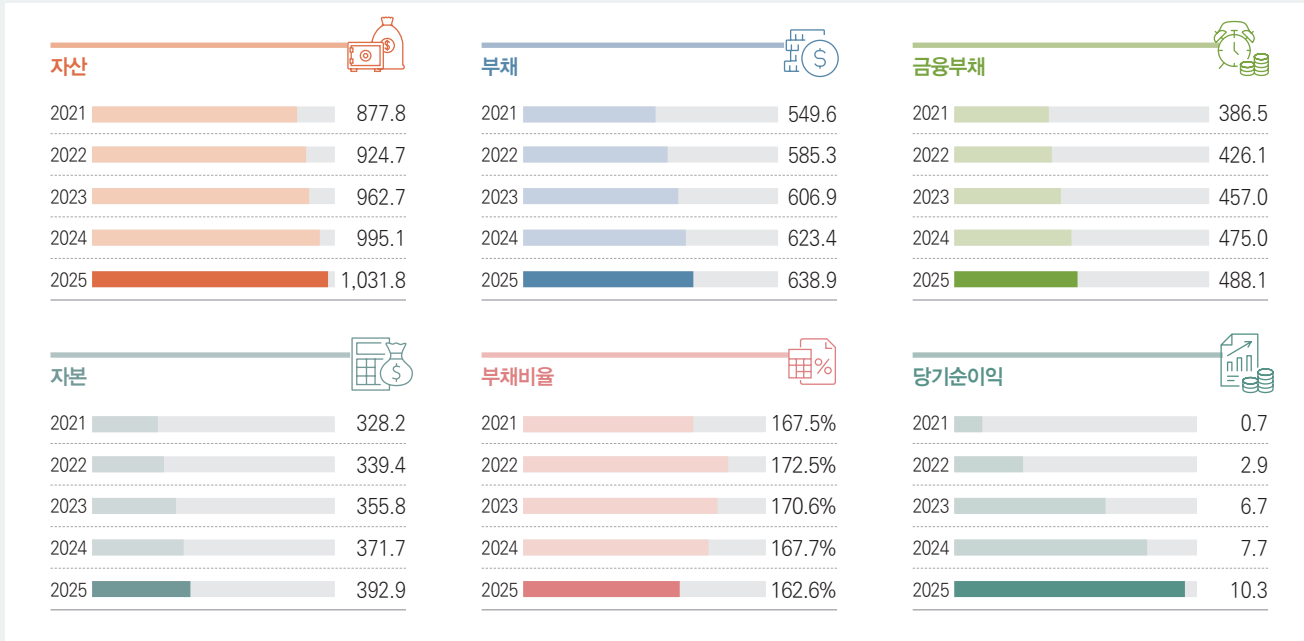
에 발생하는 매입채무 등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 중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5년간 48~49%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과 유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조 2천억원 감소한 7천억원으로 전망되지만, 2022~2025년에는 연 3조~10조원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투자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상승 후, 당기순이익 회복 등으로 2025년 162.6% 수준으로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별 투자집행과 부채관리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과도한 사업비 증액 억제를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 마련·시행(2020년 9월) 및 예비타당성 심사 시 재무건전성 심사 강화(2021년 8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경영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⓪

[그림] 40개 기관 주요 재무지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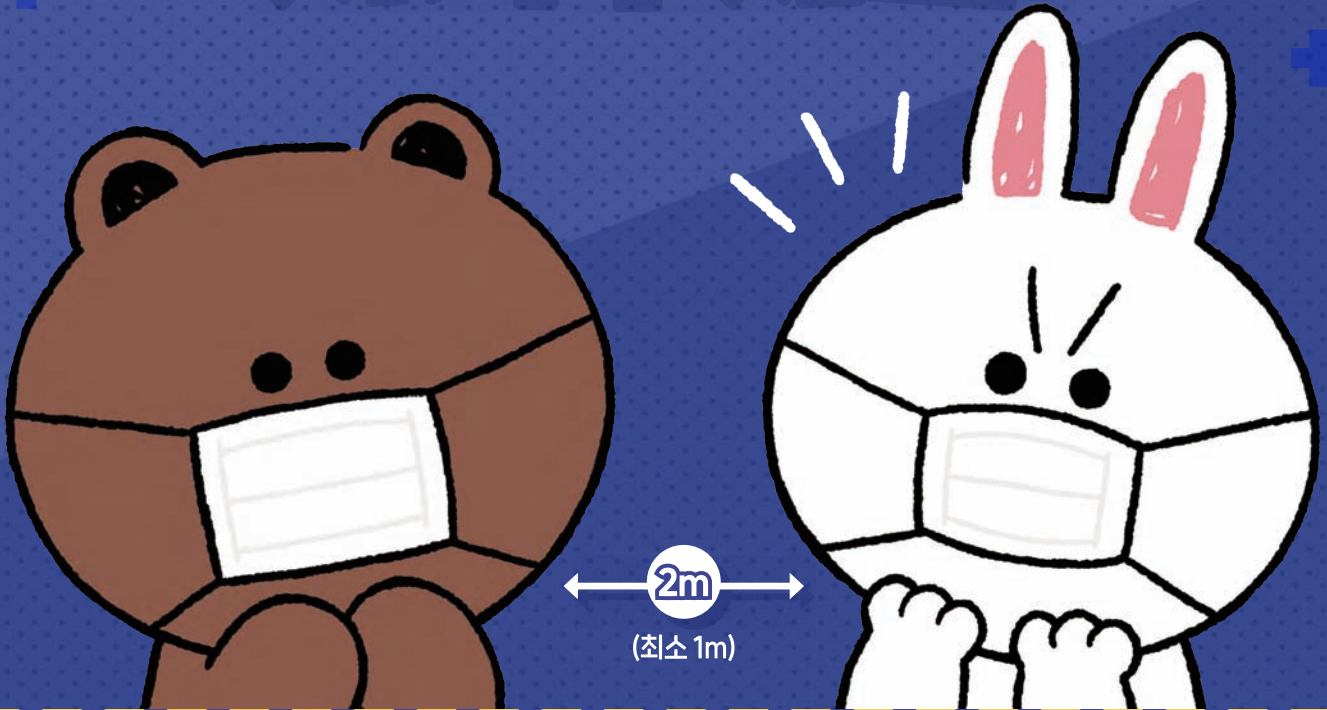
(단위: 조원)



정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켜주세요!



입과 코를 가려 **마스크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를 자주 **손 씻기**



직장 동료, 함께 사는 가족 외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한국철도! 선진 기술력과 노하우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선관  
한국철도공사 해외남북철도사업단장

세계 철도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278조원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에는 35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부터 대륙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철도 사업까지 '철도 헤게모니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국내 철도산업의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철도산업의 대표 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열차(KTX·KTX-산천·KTX-이음),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화물열차를 비롯해 광역전철까지 다양한 열차를 자체적으로 운영(operation)하고 유지보수(maintenance)하는 등 선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세계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한 이후 도입한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안전성 그리고 정시율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 철도는 국민의 이동 수단으로서 공공의 역할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철도의 현대화·선진화 경험과 함께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 대외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외 철도 시장을 개척하고 철도산업의 동반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20여 년 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으로 해외시장 진출

한국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진출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레이시아 전동차 50량 개량 컨설팅 사업이 그 시작이다. 이후

철도 건설 및 시스템 기술자문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중고 철도 차량 및 부품 등의 유허자산도 개량해 수출하는 등 사업을 다변화시켰다. 이를 통해 그동안 20여 개국에서 약 1,500억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중점 추진하는 해외사업은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 건설 및 운영 기술자문' 사업과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건설 기술자문' 사업이다.

##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 기술자문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 기술자문 사업은 필리핀 마닐라에 건설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준비에 대한 컨설팅 사업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 발주처인 필리핀 산미겔로부터 172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했다. 마닐라 메트



2019년 12월, 공사 관계자가 필리핀 메트로 7호선 차량기지 사업 부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사진 제공: 필자)

로 7호선의 철도 시스템 및 차량 설계, 시공, 차량 제작 감독, 시운전, 운영 준비 등 건설에서 운영까지 철도 전 분야에 대한 기술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준공 이후 한국 철도공사는 동 노선의 운영유지보수(O&M)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다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축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발주처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탄자니아 중앙선 기술감리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건설 기술자문 사업은 2017년 한국철도공사 중심이 되어 다국적 컨소시엄(6개국 8개사)을 구성해 수주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700억원에 달한다. 한국철도공사는 탄자니아 중앙선(1,219km, 1~5공구) 철도 건설을 위한 설계검토, 시공감리 및 사업관리를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탄자니아 철도 운영유지보수 자문, 철도 교육센터 건립, 철도공사 직원 역량 강화 등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9월, 탄자니아 교통통신부 장관이 중앙선 제1공구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사진 제공: 필자)

### 공적개발협력사업(ODA) 추진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되는 미얀마 객차 100량과 방글라데시 기관차 20량 수출 사업에 발주국의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다. 입찰, 계약, 설계, 차량 제작, 시운전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과 몽골에서 공적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개발도상국의 철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민간기업과 해외 동반 진출

이렇듯 한국철도공사는 기술력과 안정적 사업 수행으로 얻은 신뢰를 기반으로, 자문 컨설팅에서 운영유지보수(O&M)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내 우수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도 꾀하고 있다. 이는 해외시장 확대는 물론, 한국 철도산업의 기술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국 철도산업의 선진 운영 역량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철도기업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증진시키고, 철도 관련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팀 코리아’ 주역으로 세계 장벽을 넘는다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지원하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협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철도산업 해외 진출 지원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해외 대규모 철도 사업이 단순 도급형에서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발주되는 추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운영과 건설은 물론 설계와 금융 조달까지 아우르는 ‘팀 코리아(Team Korea)’ 체제로 함께해야 수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팀 코리아’의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 전략이다.

앞으로도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新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해외시장의 역할을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인재 양성 등 해외사업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교류 확대로 ‘철도 한류’ 심고, 대륙철도 시대 준비

한국철도공사는 위상 강화와 대륙철도 시대 실현을 위한 국제 철도 교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3년 가입한 국제철도연맹(UIC)의 집행이사국으로서 UIC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UIC와 유엔지역개발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웨비나(웹 세미나)에 참석해 ‘COVID-19 대응 전략과 탄소 중립’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 국제철도연수센터(IRaTCA)는 UIC 아시아 지역 연수를 총괄하는 공식 연수기관이다. 해외 철도 및 교통 공무원들



2019년 12월, '러시아철도공사(RZD) 직원 초청 연수 과정'에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러시아 철도 전문가들이 KTX 고양차량기지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 필자)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며, 2008년부터 80여회에 걸쳐 53개국 1,300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연수 교육은 한국철도공사의 선진 철도 차량 유지보수, 안전관리, 운영정책, IT 기반 철도운송 서비스 및 유지보수 기술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KTX 고양차량기지, 서울역 등 철도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어 연수생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연수 국가가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를 통해 새로운 '철도 한류'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위한 교류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부터 프랑스국영철도(SNCF)와 '한불 기술교류회'를 2년마다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1차는 2017년 한국, 2019년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되었으며, 2021년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는 양국 철도 운영기관뿐 아니라 철도 관련 민간 기관도 함께 참여해 기술 전시와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고속철도 전문기술과 미래철도 발전전략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준비도 차분히 해나가고 있다. 국제철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the Cooperation of Railways, OSJD)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 운영과 관련된 국제철도운송협정을 관장하고 국제운송표준 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현재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과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에 가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2019년 4월에는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제34차 OSJD 서울 사장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러시아와 중국, 폴란드



2019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개최된 '제34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 모습(사진 제공: 필자)

등 OSJD 회원 20개 국가의 철도회사 사장단과 관계자 300여 명이 서울을 찾아 "평화로! 번영으로!"를 주제로 대륙철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에 '제51차 OSJD 장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남북철도 및 국제 화물열차 운행 준비

현재 남북 간 경의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약 1년간 남북정기화물열차(문산~봉동)를 운행했다. 또한 정부는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남북철도 연결 공사를 추진 중이다.



세계철도 네트워크

남북 간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대표 운영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북한철도 현지 공동조사'(11. 30.~12. 17.)와 '동·서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12. 26.)에 참여했으며, 남북철도 열차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또한 대륙철도 연선국과 국제화물 시범운송 및 공동연구도 추진 중이다. 국제화물운송 규정 시범적용, 운송로 개발 등을 위해 국제화물 열차 시범운행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UIC와 OSJD 회원국 간의 정기적인 직원 교환연수, 기술교류회 등 운영 노하우와 신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두 국제기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프랑스·러시아·중국·필리핀 등에 지사를 설립해 사업 수행과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 정부의 해외사업 정책 지원

해외 철도 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정부 간 협력(G2G) 및 민관협력 사업(PPP)에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사업 주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공

항·철도 건설 등 해외시장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확대 전망에 따른 해외수주 실적 제고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이다. 공공기관은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을 기획 및 제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개발자 역할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앞으로도 UIC, OSJD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대륙철도 연결을 준비하고, 각국 철도와 지속적으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고 해외사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첫해다. 지금 세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탄소중립 실천이다. 이런 시대에 적합한 모빌리티 수단은 역시 철도다. 국제협약, 에너지 정책 등에 따라 해외 철도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올해 초 KTX-이음 개통 행사에서 대통령은 "우리 철도가 세계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기술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발 벗고 나서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남북을 잇고 대륙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철도의 희망찬 미래도 열어갈 것이다. 



황금벌판을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고속철도 KTX(사진 제공: 필자)

〈공공혁신 이야기〉는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혁신·협업·시민참여 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사례를 모은 '2020 공공기관 혁신·협업·시민참여 우수사례집'에서 발췌해 정리했다. 여기에는 혁신적인 기술과 발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킨 사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사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비스를 증진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공공혁신 이야기

- 5G ·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_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우리 아이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시민참여 학교급식 관리단\_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5G ·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

##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질병 진단과 치료에서 의사 개인의 역량 의존 및 오진 사례가 다수 발생

\* 국내 오진의 61%가 '암 오진'이며, 폐암 20.3%, 유방암 16.2% 차지(한국소비자원, 2015)

□ 응급환자 이송 중 의료진과 소통 문제, 이송 시간 장기화로 인한 환자 치료 골든타임 손실 등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체계 개선 필요

\* 현,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 병원정보시스템의 EMR(전자 의무기록), 소방청 U119 안심콜 기록 등의 실시간 연계 및 활용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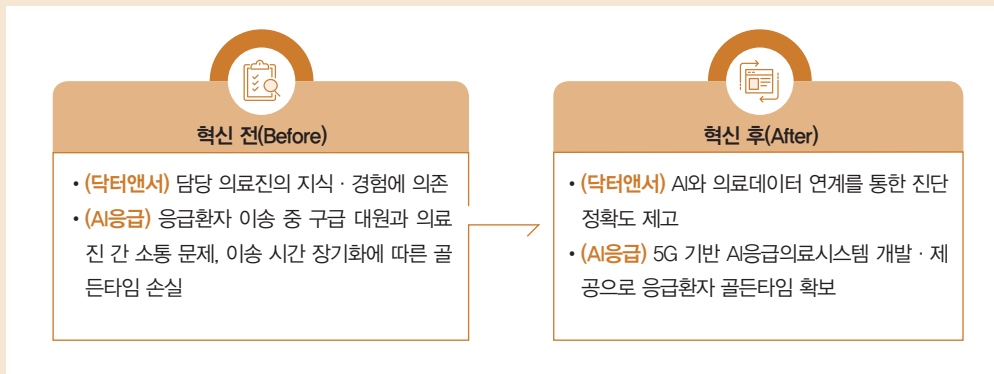
## 추진 내용

□ 5G, AI 클라우드 등 'ICT+의료' 융합으로 국민체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밀의료 서비스(닥터앤서, AI응급의료시스템) 개발 · 실증

- (닥터앤서)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 · 분석한 8개\* 질환에 대한 21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체감 서비스 마련

\* ① 심뇌혈관질환 ② 심장질환 ③ 유방암 ④ 대장암 ⑤ 전립선암 ⑥ 치매 ⑦ 뇌전증 ⑧ 소아 희귀질환

- (응급의료) 응급의료 단계(신고 접수 → 구급차 내 응급처치 → 환자 이송 → 응급실)별 빠른 응급 진단 및 처치를 지원하는 지능형 응급의료 서비스 개발



## 주요 성과

- 디지털 헬스케어 국민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소방청 등) 및 유관기관, 의료기관, ICT 기업 등이 협력해 연구개발과 기반 조성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 식약처-NIPA MoU(2020. 3.),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식약처 간담회(2020. 7.), K-Hospital fair(2020. 11.), Si응급 소방청/복지부 협업 등

- (닥터앤서) 닥터앤서의 임상 효과 확보와 정확도 향상을 위해 협력 기관들과 국내외 실증 추진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2020. 11. 25.) 행사 참석 시 닥터앤서 주요 성과 사례(소아 희귀유전질환)를 인용해 모두 발언 진행

### 5년 걸리는 소아 희귀질환 진단... '닥터앤서'로 15분 만에 진단

- 출생 후 발달 지연으로 세 살이 되도록 고개를 들지도, 기어 다니지도 못하던 남자아이를 닥터앤서를 통해 '선천성 근무력증' 사실 확인 → 신경전달물질 투여 1개월 만에 호전
- 발달 지연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던 1세 여자아이는 닥터앤서로 매우 드문 형태의 '열성 유전형 세가 와병' 진단 → 도파민 투약 후 1개월 후 고개 들고 직립

- (응급의료) 환자 응급데이터(영상·음성·생체신호)를 통합 플랫폼으로 전송한 후 분석 결과를 응급 현장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5G 전송 인프라 구축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복지부, 소방청) 간 협력 기반, 4대 응급질환(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심정지) 데이터 수집 및 전송체계 구축

\* (행정 협력)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실무 협력) 개발 참여기관(의료, ICT 기업) 지역 소방본부 등

- 응급 차량 최적경로 이송 내비게이션 및 이송 환자 중증도 예측 알고리즘 등 Si응급 알고리즘 서비스 개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유효성 검증

\* Si응급의료시스템 실사용자(구급대원 114명)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만족도 85.2/80점 달성)

## 향후 계획

- 닥터앤서 국내 실증, 한(韓)-사우디아라비아 교차검증 추진(~2021. 3.) 및 외교부 협력을 통한 닥터앤서 성공적인 해외 진출 지원

\* 닥터앤서 사우디 교차검증을 통해 효과성 검증 완료 후, 국가방위부 산하 6개 병원 적용 추진


\*\* 외교부-중동(UAE)에 닥터앤서 협력 제안(2020. 11.)

- 5G 기반 Si응급의료시스템 테스트 검증 및 고도화(2021)



관계부처 기관 간 협업 추진을 통한 5G·AI 기반의 인프라 조성

‘닥터앤서’란(Dr. Answer: Ai, Network, Software.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의사의 진단·치료를 지원하며 무엇이든 다 대답해 주는 AI 의사!</li> <li>• 인공지능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단·치료에 답을 준다는 의미</li> </ul>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병원 검진과 진료에 인공지능(AI) 의료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5G 기반 응급체계 개선과제를 추진했다.

먼저, 공공성 및 파급 효과가 큰 난치성 8대 질환(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 희귀질환)에 대한 21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닥터앤서) 개발 후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38개 병원(닥터앤서 참여 병원 25개+추가 실증 병원 13개) 실증을 추진했고, 4대 응급질환 대상으로 5G 기반 초고속 응급 인프라 구축 및 AI응급서비스 개발 등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로써 5G와 AI를 활용해 구급차에서 수집·분석·전송하는 환자 영상과 생체정보 등을 바탕으로 구급대원과 의료진 모두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졌다.

닥터앤서, 의료현장 보급·확산으로 국내 의료 ICT 기업의 경쟁력 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닥터앤서의 의료 현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인허가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보급 확산 지원을 위한 ‘과기부-식약처 간 닥터앤서 간담회’(2020. 7.)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임상적 정확도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인허가와 실증 추진으로 과업 기간 3년 만에 닥터앤서 소프트웨어 21개 중 6개가 의료기기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처럼 닥터앤서는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단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치료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의료 ICT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대표적으로 소아 희귀유전질환 진단(평균 5년 → 15분), 관상동맥 CT 판독(수십분 → 1~2분), 대장용종 판독 진단 정확도(74~81% → 92%), 치매 판독 시간(4~6시간 → 1분 내외)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질환별 소프트웨어의 임상효과 확보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내 38개 의료기관과 다기관 실증 및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지원했고, 사우디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과 닥터앤서 교차검증을 착수(2021. 7.)해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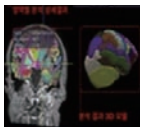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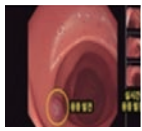

〈표 1〉 의료기기 인허가 현황

인허가 완료(6개)	비의료기기(6개)	인허가&시제품 개발 중(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진단(2)</li> <li>• 뇌출혈 진단(2)</li> <li>• 한국인 표준 WMH 지도 및 시각화(2) (뇌 영상 수치 자동 산출)</li> <li>• 대장용종(암) 분석/진단(2)</li> <li>• 치매 조기 진단(3)</li> <li>• 전립선암 영상 기반 진단(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혈관질환 재발 예측</li> <li>• 발달장애 유전변이 해석</li> <li>• 난청 유전변이 해석</li> <li>• 유방암 발병 위험도 예측</li> <li>• 대장암 발병 위험도 예측</li> <li>• 대장암 치료 의사결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동맥류 병변 진단</li> <li>• 전립선암 병기/재발/생존 예측</li> <li>• 전립선암 조직 병리 진단</li> <li>• 발작 시간 예측 및 발작 초점 추정 알고리즘</li> <li>• 정상 신경 생리맵 기반 정량화 분석</li> <li>• 유방암 재발 위험도 예측</li> <li>•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 예측</li> <li>• 심장질환 진단</li> <li>• 심장질환 다면 데이터 통합 시각화</li> </ul>

〈표 2〉 닥터앤서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활동

사우디 교차검증 착수보고회 (한-사우디 화상회의, 2020. 7. 15.)	닥터앤서 간담회 (2020. 7. 31.)	한-중동(UAE) 보건협력 간담회 (2020. 11. 30.)
 	 	 
<p><b>한국 측 참석자</b> 과기부(SW정책관), NIPA, 닥터앤서 사우디 교차검증 참여 병원 및 기업 연구진</p>	<p><b>참석자</b> 과기정통부 차관, 식약처 차장, NIPA, 닥터앤서 연구진</p>	<p><b>참석자</b> 외교부, 과기부(SW정책관), 산업부, NIPA, 주한 UEA대사 등</p>

〈표 3〉 닥터앤서 1.0 주요 임상 성과 사례

	소아 희귀	치매	대장암	심근경색
<b>BEFORE</b>	진단 성공시간 평균 5년	진단 소요시간 4~6시간	대장용종 판독 정확도 74~81%	심장CT 판독시간 수십분
<b>AFTER</b>	15분 내외	1분 내외로 단축	92% 향상	1~2분으로 단축
				

**응급환자 이송 중 환자치료 골든타임 손실**

응급의료센터 중 다른 병원에서 전원한 사례는 5만 5,763건으로 총 내원 환자 수 약 550만명(2017년 응급의료센터 기준)의 약 10%에 해당한다. 환자들의 전원 사유는 병실 부족(3,101건), 중환자실 부족(767건), 응급수술/처리 불가(6,989건) 등이다. 중증외상환자 발병 후 1시간 이내(골든타임)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환자는 7,444명(2017년 응급의료센터 도착 중증외상환자 총 3만 5,673명)으로 20.9%에 불과하다. 또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담당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293만 2,574명(53.3%), 진료받지 못한 환자는 207만 3,676명(37.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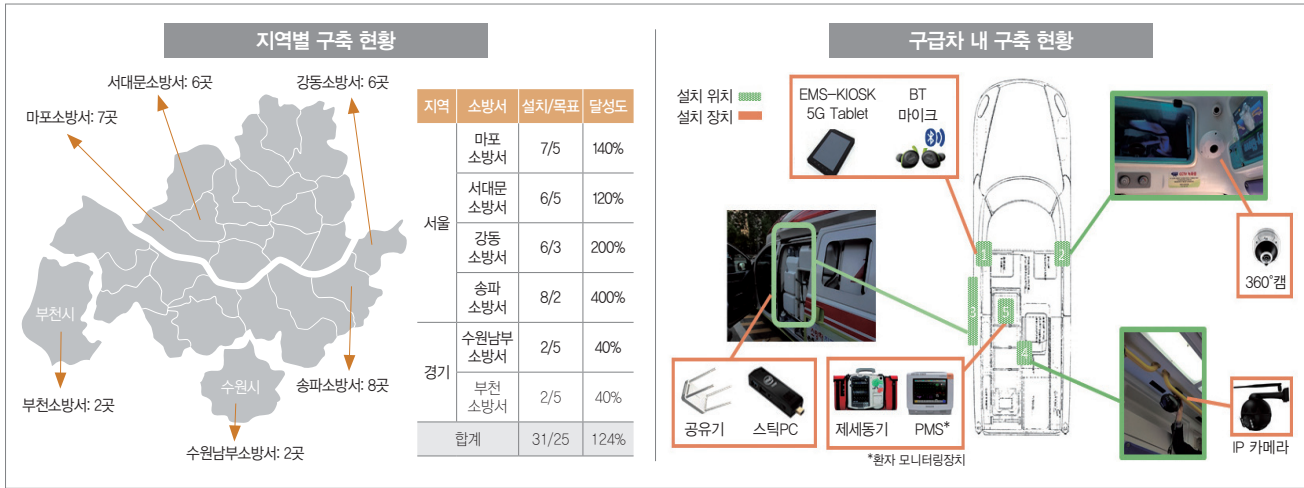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질병 진단과 치료에서 의사 개인의 역량 의존 및 오진, 응급환자 이송 중 의료진과 소통 문제, 이송 시간 장기화에 따른 환자 치료 골든타임 손실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체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4대 응급질환 데이터 수집 및 전송체계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복지부, 소방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4개 응급질환(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심정지) 데이터 수집 및 전송체계를 구축했다.

5G 전송체계는 병원 전(前) 단계에서의 5G 기반 응급정보 수집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5G 네트워크 실시간 전송 테스트 기반을 마련했다.

[그림 1] 5G 전송체계 구축 현황



\* 마포·서대문·강동·송파 119구급차 내 5G 기반 응급데이터 수집 및 전송 기반 구축(31대)

AI 구급활동 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2차년도(2020년)까지 개발된 시응급시스템 사용자 검증을 위해 구급대원 11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한 결과 85.2점으로 목표(80점) 대비 106%를 달성했다. 또한 사전 설문 결과에서 요구되었던 구급활동 서비스 고도화 수요 만족이 84.1점, 구급활동 표준지침 시 가이드가 84.3점으로 나타났다.

시 구급활동 서비스는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 차량 최적경로

이송 내비게이션', '이송환자 중증도 예측 알고리즘', '시응급 알고리즘 서비스 개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유효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시 분석을 통한 응급환자의 신속 정확한 초기 응급처치 지원, 최적 이송병원 선정 등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관계부처 및 병원 간 지속적인 협업과 국내외 교차검증을 통해 2021년 5G 기반 시응급의료시스템 테스트 검증 및 고도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2] AI 구급활동 서비스



# 우리 아이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시민참여 학교급식 관리단

## 추진 배경

###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3만 1,137명 중 32%가 학교에서 발생(9,9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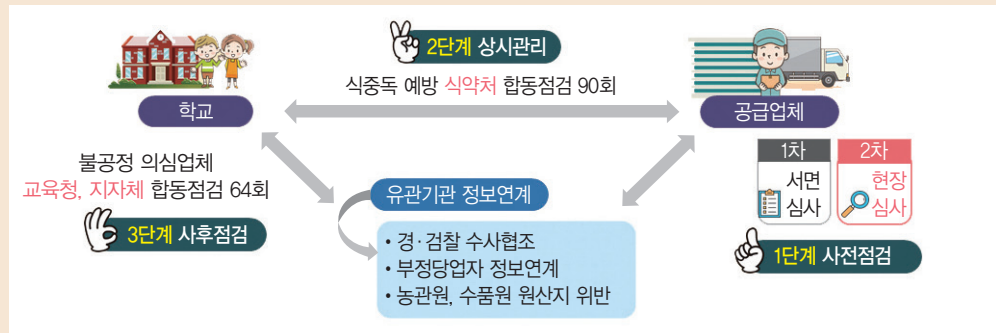
- 학교급식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자재 관리 강화 요구 증대
  - 우리 아이가 먹는 급식은 안전할까? 영양사가 없는데 위생관리는 어떻게?
  - 다양한 급식 보조금, 투명하게 쓰이고 있나?
- 시민사회 참여와 폭넓은 협력으로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학교급식 위해요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전 예방 강화 요청 증가
  - 노하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학교급식 관리를 aT의 전문성으로 해결
  - 전국 초·중·고의 90%가 사용하는 aT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활용

## 추진 내용

### 시민이 참여하는 '급식관리단' 및 '학부모점검단' 운영

- aT 급식관리단이란?
  - 식품위생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은퇴자들과 농식품 유통 경험이 풍부한 aT시니어직능클럽 회원으로 급식관리단 구성(25명)
  -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의 사업장 환경과 시설 등에 대한 전수 점검, 위생안전과 관련한 현장지도 시행 (식자재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 1,242개소 점검)
- 학부모점검단이란?
  -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전국적으로 구성(30명)
  - aT 급식관리단과 함께 공급업체의 위생점검에 직접 참여해 자녀들의 급식 안전관리 활동 수행
-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안전 위반업체 단속
  - 식약처, 교육청, 경찰청, 17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공정·불성실 행위 완전 차단
  - 식약처 합동 전국 학교급식 공급업체 식중독 예방 점검(90회), 교육청 합동 공급업체 불시 점검(64회), 민간 위생기업 세스코와 안전진단 및 위생 컨설팅(10개소)

- 학교급식 입찰 거래 비리 근절을 위한 eaT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구축
  -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169개소를 추출해 불시 점검 시행
  -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 행위 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은 eaT 시스템 사용 제한으로 학교급식 입찰 참가 차단
- 학부모가 참여하고 제안하는 열린 학교급식 정책 체계 마련
  -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및 점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 급식관리단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교급식 점검 교육,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구매 모니터링 시행
  - 김치, 축산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공급업체 현장점검을 통해 식자재별 현장 관리 기준 설정 및 학교급식 납품기준 정책 검토
  - 납품기준 등 입찰공고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방안 개선



주요 성과

시민참여, 현장점검 강화로 학교급식 안전사고를 줄이고 더 건강한 먹거리 공급

- 불성실·불공정 공급업체 사전 차단 노력으로 부정행위 43% 감소
  - 2018년 344건 → 2019년 165건 → 2020년 94건
- 총 1,242개소 현장점검으로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대폭 감소
  - 2018년 3,136명 → 2019년 1,214명 → 2020년 448명(전년 대비 63% 감소)
  - 약 102명의 경력단절 여성, 新중년 전문가 52명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
  - 2020년 농식품 국민참여 혁신과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020년도 기재부 혁신·협업·시민참여과제 최우수 과제로 선정(2021. 3.)

향후 계획

학교급식에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으로 역할 확대

-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ICT 기반 식자재 안전통합관리(2020. 7. 뉴딜사업 선정)
  - 국가재정 낭비 방지, 급식 보조금 현황 실시간 파악, 지역산·친환경 소비 확대 기반(농가소득 창출)
  - 행안부 「정보처리장치 고시」 개정으로 공공급식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2021. 2.)

##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환자 중 32%(9,990명)가 학교에서 발생한 만큼 학교급식 식품 안전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절기 식자재 보관온도 기준 미준수로 인한 식중독균 발생부터 겨울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까지 학교급식을 위협하는 위해요소 또한 다양하다. 특히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면역력이 취약한 다수의 학생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이처럼 성장기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교급식 안전관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aT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0%가 사용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급식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학교와 식자재 공급업체 간 계약 과정이 전산화되는 만큼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높아지게 된다.

### 급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aT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식자재 공급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식자재 공급업체 점검 협력체계를 2018년에 구축했고, 현장 위생점검과 위생 컨설팅 및 학교급식 관련 정책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공급업체 관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이 나날이 증가했고, 시민사회의 학교급식 안전관리 요구 또한 강화되었다.

그동안 투명한 학교급식 입찰 시스템 구축을 위해 IP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통해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담합업체를 차단해 온 aT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해 식품안전까지 관리 방향을 확대했다. 이에 2019년 aT 학부모가 함께 활동하는 급식관리단을 정식 출범했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명 아래 활동하게 되었다.

## 식품안전 전문인력으로 급식관리단을 구성하다

### 전문가와 함께하는 식자재 안전 공급망 구축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급식관리단 활동을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인력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공급업체 현장에서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지식을 적용하고 위생진단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에 aT는 식품위생 및 농식품 유통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식품 전문가 단체를 찾아가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급식 현장 위생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aT는 2020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은퇴자들과 농식품 유통 전문가 aT시니어직능클럽으로 구성된 급식관리단(25명)을 위촉했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과 eaT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 위생점검 및 위생 컨설팅(2020. 5.~12.)에 투입했다.

식품위생 및 유통 분야의 오랜 업무 경험으로 빛어진 이들의 전문성은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별 공급업체마다 최적화된 위생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급식관리단은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컨설팅 효과를 톡톡히 내어 공급업체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 aT형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aT는 천편일률적인 위생점검에서 벗어나 학교급식 위생 관련 주



급식관리단이 위생점검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모습(사진 제공 : 필자)

요 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점검 방식을 도입했다. 현장점검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고, 중대한 위생 위반사항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치하는 행정효율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현지도(876건), 시정보고(308건), 변경등록(220건)으로 세분화된 단계별 강화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식자재 이력 관리부터 냉장·냉동시설 재정보까지 폭넓은 조치사항을 적시에 진행했다.

**학교급식 현장으로 학부모를 초대하다**

**우리 아이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학부모점검단 구성**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지 학부모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급식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라고 불릴 만큼 학교급식 시장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다. aT는 이에 착안해 수요자와 함께하는 학교급식 안전관리 협력체계의 기반을 다져 왔으며, 2020년 시·도 교육청 추천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학부모 30명을 '학부모점검단'으로 구성했다.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안내**

aT는 학부모들이 학교급식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만큼 학교급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했다. 이에 학부모점검단 대상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원리와 특징, 학교급식 공급업체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e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프로세스를 안내하며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발전 의견을 수렴했다.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점검 대비 학부모 맞춤형 사전 교육**

학부모점검단의 경우 초기에는 관련 안전기준 지식 및 점검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식자재 공급업체 현장점검에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했다. 이에 aT는 학부모점검단 맞춤형 현장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 방법을 설정하고 교육함으로써 현장점검 시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최소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화상회의로 진행된 학부모점검단 사전교육은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학부모점검단은 사



학부모점검단이 맞춤형 사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 : 필자)

전교육 과정 틈틈이 급식산업과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견해를 공유하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직접 점검한다는 자긍심으로 실무적인 지식까지 습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실전!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점검**

사전교육 이후 진행된 학부모점검단 현장점검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교육 당시 주요 점검사항을 숙지한 학부모점검단은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의 냉장·냉동시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온도 기록지 작성 여부나 식품-비식품 간 교차오염 위험 정도를 판단했다. 또한 지자체 및 식약처 위생점검 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반품 및 폐기품의 별도 보관 장소 설정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학부모점검단은 급식관리단과 그룹을 구성해 김치류



학부모점검단이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점검에 참여한 모습(사진 제공 : 필자)

나 축산물 등 대형 식품제조업체 현장점검에 동행했다. 학부모 점검단과 급식관리단은 함께 점검을 수행하며 각각 수요자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학교급식 현장의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했고, 학교급식 공급업체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투명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환경 조성

aT는 학부모에게 낯선 식자재 입찰 및 계약 과정을 쉽게 안내하고, 실제 식자재 계약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한 식자재 구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발굴하는 '학부모 안전구매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을 통해 학부모점검단은 학교가 입찰공고를 게시할 때 식자재 납품 기준이나 계약 준수사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했다. 이는 향후 eaT 시스템 이용약관 및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제도 개선의 아이디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매우 발전적인 활동이었다.

### 급식 안전성 강화와 부정행위 감소,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전국 단위로 임명된 급식관리단과 학부모점검단은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며 학교급식 공급업체 1,242개소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이들의 노력은 2020년 기준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수가 전년 대비 63% 감소(2019년 1,214명→2020년 448명)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더불어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학교급식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뿐만 아니라 급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납품 부정행위 또한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한 학부모점검단과 급식관리단의 노력으로 공동 업무관리나 미등록 배송차량 운영 등 공급업체의 불성실·불공정 납품행위가 전년 대비 43% 감소(2019년 165건→2020년 94건)했다. 이는 우리 아이의 먹거리를 점검하는 학부모의 책임감과 사전교육 및 식품위생 전문가의 코칭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우수한 성과 덕분에 aT 급식관리단과 학부모점검단 활동은 2020년 농식품 국민참여 혁신과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시민참여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시민이 직접 참여해 얻은 쾌거

#### 학부모가 지휘하는 학교급식 안전관리의 중요성

코로나19 여파로 위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급식관리단과 학부모점검단이 이루어낸 성과는 다음과 같은 학교급식 안전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학교급식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관심이며, 이와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위생진단이 필수다. 그리고 이는 학교급식의 실수요자인 학부모가 선두에서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지휘할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 식품 안전관리 일자리 창출의 기회

급식관리단과 학부모점검단 운영의 열매는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2019년 시범운영까지 포함한다면 학교급식 공급업체 점검에 운용된 인력은 학부모 102명, 식품위생·유통 전문가 52명으로 총 154명이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실버 세대의 일자리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을 학교급식 점검단으로 채용하고 '식품안전'이라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 공공급식 안전관리까지

aT는 학교급식에서 나아가 향후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급식 프로세스를 모두 전산화해 관리하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는 급식 시장에서 향후 현장 안전관리는 필수적이다. 현장의 식자재 위해요소를 전부 데이터 형태로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 위생점검을 통해 사업자에게 식품위생 관련법을 교육하고 식품사고를 예방하는 위생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나날이 커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급식관리단과 학부모점검단 활동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급식 정책의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식품위생 전문가와 aT가 급식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소중하다. aT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이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공공기관 잡앤티톡(Job&Talk)



김영훈  
예술의전당 경영본부 인사관리부 과장

## 인사 담당자 Q&A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인사·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본부 인사관리부 김영훈 과장입니다. 예술의전당 채용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지원자가 많은데, 『공공경제』를 통해 채용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릴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예술의전당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술의전당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또한 연평균 300만명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예술의전당은 공연·전시·교육 등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더불어 방문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직장으로서 예술의전당의 장점을 알려주세요.

예술의전당에서는 언제나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고, 방문객들은 행사와 공간을 향유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술의전당에서 일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즐거운 일상에 이바지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예술의전당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예술의전당 조직은 크게 경영본부, 예술본부, 문화본부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각 본부의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문화예술 창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미션 아래 예술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기획·제작합니다. 또한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닌 장르와 작품을 소개해 문화향유 가능 계층을 확대하며,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효율적 공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후의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에 정규직 채용을 완료했고,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추가로 정규직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응시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기관은 정부의 블라인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 현장에 필요한 수행 능력을 평가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력·성별·지역 등에 제한이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나 보훈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 예술의전당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역량검사 및 비대면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시역량검사(인·적성검사), 실무면접(1차 비

대면, 2차 대면), 인성면접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용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만큼 지원자가 작성한 입사지원서가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 입사지원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요?

NCS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므로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의전당 지원동기와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 이유를 지원자의 역량과 경험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많은 입사지원서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글을 두괄식으로 작성해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필기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전형의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SI역량검사는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정규직 채용의 경우 인성검사에 해당하는 성향 파악과 적성검사에 해당하는 전략 게임을 비대면

으로 수행했습니다. 지원자의 조직 적응에 필요한 인성과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난도가 높지 않은 만큼 부담 없이 응시하시면 됩니다.

### 면접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면접전형은 실무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면접은 비대면과 대면 면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채용 분야의 실무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직무 및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인성면접은 직업윤리, 문제해결, 대인관계 등을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합니다.

### 인사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 회계, 전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은 순환 보직을 시행하고 있어 본인의 역량이나 적성 등에 따라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채용이 비정기적이고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만큼 입사를 위해서는 지원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가득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의전당 소개

<b>미션</b>	문화예술 창달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예술 진흥		<b>비전</b>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국가대표 문화예술기관의 위상 정립
<b>경영목표</b>	예술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 기획 제작	공공성과 보편성 지닌 장르 · 작품 소개로 문화향유 가능 계층 확대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플랫폼으로서 효율적 공간 운영 및 유지
<b>관점</b>	문화예술 창작자 관점	○ 문화예술 수요자 관점	○	장(場): 생태계
<b>핵심가치</b>	기획 · 제작 기능 강화	○ 공공성과 보편성 확보	○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b>코로나 대응 전략방향</b>	예술가들의 창작 기회로 일자리 창출	비대면 문화향유 기회 확대		안전한 문화예술 플랫폼(場) 조성
<b>전략과제</b>	01 신규 공연장 확충 02 작품 창작 기회 확대	01 새로운 장르의 영상 콘텐츠 제작 보급 02 실감형 콘텐츠 기반 구축		01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02 상생을 위한 예술장터 마련

# 공공기관 잡앤티톡(Job&Talk)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김광열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사팀 차장

## 인사 담당자 Q&A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팀 김광열 차장입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총괄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게임·음악·패션·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등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작 지원, 기획·창작·제작·유통 및 해외 진출,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입사 후에는 어떤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나요?

우리 기관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산업을 기능적으로 지원합니다.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해외 진출, 투자 등의 전체 주기에 걸친 지원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방송 드라마의 제작 지원을 담당하거나, 제작된 드라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온·오프라인 콘텐츠 관련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랑할 만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기관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문화 콘텐츠를 지원하는 만큼 국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조직문화가 자유롭고 업무가 재미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지원에

대한 결과물을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보람과 재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 2021년 채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신입직원 공채를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전 분원에서 근무할 신입직원 2명과 경력직원 7명 내외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게시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응시 자격을 설명해 주세요.

신입직원은 성별, 학력,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공고일 기준 만 60세(우리 기관 규정에 따른 정년) 미만이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인사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사회형평 채용을 위해 보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름),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천지역 인재 등의 가점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면접전형(역량·최종)으로 진행됩니다. 서류전형은 채용 인원의 20배수, 필기전형은 5배수, 역량면접은 2.5배수를 선발하고, 최종면접에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우리 기관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전형에 감사실의 채용 감사인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요?

자기소개서를 어떤 방식으로 쓰면 좋을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본인의 경험이 우리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면접전형에서 질문 사항이 될 수 있는 만큼 답변할 내용도 옆두에 두고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수많은 지원서류를 보기 때문에 내용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전형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필기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로 시행됩니다. 시험장에 오시기 전에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입장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고 사소한 것들을 놓쳐서 시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필기전형은 무엇보다 시간 내에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배분과 우선순위에 따른 문제 풀이 등의 요령을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시험장 입장 전 발열 체크와 기타 신분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니, 일찍 도착해 여유롭게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마음을 준비한 후 응시하면 좋겠습니다.

### 면접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콘텐츠 분야는 변화가 매우 빠른 만큼 최신 트렌드와 이슈 등을 공부하고, 그 의의와 전망 그리고 진흥원의 역할 등에 관해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면접전형 전에 우리 기관의 SNS, 보도자료, 홈페이지와 알리오 공시 등을 통해 정

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본인의 역량과 장점을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면접 시 자신감 있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피치 훈련을 하거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연습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

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채용 담당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채용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서류와 필기전형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면접에서 실수하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입사 후에는 많은 내·외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이때 소통능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평소 주변 지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시고, 면접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차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소개**

미션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비전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경영방침

**더 낮게**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친화적 열린 기관

**더 깊게**  
전문성 · 효율성 · 공정성의  
콘텐츠 진흥 전문기관

**더 넓게**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문화 중심 기관

핵심가치

창의 · 혁신

미래 · 선도

포용성장

코로나19 대응

산업생태계 복원

비대면 산업 육성

공정경제 실현

3대 전략목표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회적 가치 제고

9대 전략과제

01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04 기업 성장기반 마련  
투 · 융자 확대

07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 조성

02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

05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

08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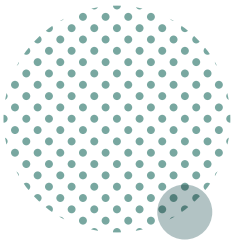
03 시장 주도형  
콘텐츠 제작 지원

06 신한류  
해외 진출 확대

09 사람 중심  
청렴 기관 운영



##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윤정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대리

###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국민에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발전된 전기는 배전, 송·변전을 통해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우리 회사는 품질 높은 전기 공급, 정전 없는 전기 공급을 위해 전력망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용 확대를 위한 전력망 계통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손실 없는 전기 공급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재생, 송배전, 에너지 신사업 등 다양한 영역의 해외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 현재 담당하시는 직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접수 및 접속 현황에 대한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접수될지 전망하고,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통보강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합니다. 이는 관련 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업무 시스템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빠르게 조치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발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전기공학 전공이라 전공 관련 회사를 찾던 중 한국전력공사라는 회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떤 회사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근처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했습니다. 하는 일, 회사의 장단점, 업무 강도 등을 현직자분에게 직접 들으면서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에 친절하게 응대해주신 직원분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취업스터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준비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문제풀이 노하우를 알 수 있고, 모의면접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스터디원과의 경쟁도 도움이 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스터디원을 보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 학창 시절 활동이나 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도전적인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국토 종주를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이동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주를 완료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이 그간 힘들었던 것을 모두 잊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무언가에 도전할 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도전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자신감을 선사해보길 권합니다. 비단 취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말씀해주세요.

엑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든 자료를 정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엑셀은 필수입니다. 저는 처음에 엑셀을 거의 다룰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익히다 보니 어렵기만 하던 엑셀이 어느 순간 익숙해졌습니다.

### 현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엑셀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엑셀을 능숙하게 잘 다루게 된 점이 좋습니다. 저는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시스템화해 업무 효율을 높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매주 정해진 기간 안에 통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고, 시스템 개선 업무는 여러 담당자와 협업이 필요한 만큼 다수와 같은 방향으로 뜻을 모아 일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습니다.

### 입사 1~2년차 시절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신입사원 교육을 약 2주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위 안에 들어보자는 것이 입사 후 첫 목표였지만, 결과는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동기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기간에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사업소

에서 업무를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배신은 없습니다.

### 입사 이후의 생활과 경험에 비추어 입사 전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공공기관이라고 모두 다 여유롭고 바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직적이고 군대 같은 문화, 끈대 많은 조직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실제 입사해보니 수직적이지 않고 뭔가를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해주려는 선배님이 훨씬 많습니다.

###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주세요.

진심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은지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방문해 분위기나 하는 일을 살펴보고,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부딪혀 경험해보면 본인이 방문한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평소 내가 원하던 곳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입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할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놀고 싶어도 참고, 묵묵히 자신의 계획대로 한 단계씩 준비해간다면 결국 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슨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기간이 길어진다고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표한 기간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입사 준비에만 집중하길 권합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있듯이 고된 노력이 하루 그리고 한 달씩 쌓여 입사라는 달콤한 열매를 선사할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 준비된 사람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성인

한국석유공사 해외사업2처 유럽사업팀 대리

###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는 석유파동과 같은 석유 수급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1979년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석유공사의 주된 사업은 석유개발 사업과 석유비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다른 주유소 대비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는 알뜰주유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종합석유정보망인 '페트로넷'과 유가정보망인 '오피넷'을 비롯한 석유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담당하시는 직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영국 애버딘에 위치해 유럽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자회사 Dana사의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Dana사의 석유시추 및 생산설비 투자비 관리, 매장량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업무와 석유탐사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본사 기술진과 협업해 기술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이를 적기에 보고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도움으로써 Dana사의 석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석유공사의 근무 분위기는 어떤가요?

'젠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대체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해 다소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마초적인 분위기도 없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복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도 많습니다. 유연근무제도 잘 정착된 편이라 많은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석유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석유개발이라는 사업에 매력을 느껴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사업은 성공 확률도 낮고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지만,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동안의 실패를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보물찾기와 같은 사업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다면 크나큰 보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아이러니하지만 취업시장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해본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유학생 선발, 원했던 대학원, 인턴, 계약직, 정규직 입



사시험 등 모든 곳에서 불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표로 했던 한 회사의 경우 세 차례 지원해 최종면접에만 세 번 미끄러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때부터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보고 교내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도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독단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입사전형을 치를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말씀해주세요.

영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ana사는 일부 공사 직원 외에는 모두 영국 현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서 또한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Dana사에서 수령한 문서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를 한글 보고자료로 정리해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직원과 메일, 전화, 화상회의 등을 통해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아울러 사업팀의 특성상 현지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나 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슈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그리고 본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양쪽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현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점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업팀의 업무는 재무나 회계, 예산, 경제성, 심지어 법률이나 주식시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범위가 넓은 만큼 담당하는 업무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 담당자로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

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 입사 1~2년차 시절에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2019년 11월에 Dana사에서 참여한 영국 Tolmount East 광구의 탐사시추 성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처음 담당해 모니터링했던 탐사시추인데, 시추 성공 소식을 확인했을 때의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언젠가 탐사시추 현장에서 직접 시추선에 올라 함께 작업하고, 탐사시추를 성공시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 석유공사를 포함해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주세요.

석유공사의 경우 1차 전공시험 · 어학능력, 2차 NCS · 인성검사, 3차 직무 · 종합면접으로 전형이 진행되는데, 단계별로 제로베이스가 아닌 누적 점수로 평가해 고득점자를 선발합니다. 보통 어학점수나 인성검사, 면접에서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라, 점수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1차 전공시험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시험은 범위가 넓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니, 석유공사를 목표로 한다면 채용공고가 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목표로 하는 기관의 채용전형을 명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감염병 사태로 취업시장이 더욱욱 악화된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심경이 어떨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좁은 바늘구멍을 뚫는 사람들은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싶어 하는 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나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지역 토박이에서 지역 전문인재로!



유수진  
창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 인재혁신실 주임

※ 이 글은 '2020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지역인재채용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을 전제한 것입니다.

###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후배분들에게

“귀하는 이번 채용과정의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라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문구입니다. 학부 시절 필기시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땐 ‘지역대학’이라는 타이틀이 나만의 역량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막연한 두려움이 앞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정량적인 스펙쌓기에 전전긍긍하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대 제도는 취업이라는 어둡고 막막한 길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또한 스펙을 넘어 지역인재로서 자신의 가치를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장미꽃은 가지 사이에서도 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합격수기가 취업의 길에서 알찬 열매를 맺을 후배분들에게 꽃으로 피어날 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 지역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숨은 의미는 지역대학이라는 선입견에 가려진 채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 후배들은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입사에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지역대학에서도 충분히 학술적·문화적 견문을 넓힐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의 경우, 한 지역대학 무역학과에 재학하면서 지역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나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소위 스펙이라는 학점, 공모전, 토익점수가 아닌 나만의 스토리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 전공과 맞닿은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키워드로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무역양성단 6기 대전지역 마케터로 활동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홍보마케팅에 지원했고, 실제 베트남 수출전시회에서 바이어 계약 성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내외 경험을 길렀습니다. 또한 미국 TED에서 자발적으로 연출권을 얻어 지역대학과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TEDx행사를 개최했습니다. KBS 소속 PD, 4대 사막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한국인 등 굴지의 연사들을 초대하는 일부터 지역 기업의 물품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까지 모두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 및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우대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및 NCS 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앞서 말한 계량화된 스펙보다는 기관 맞춤형 인재를 찾고 있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키워드로 삼아 쌓은 저만의 스토리는 창업진흥원 입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이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지역인재를 넘어 지역 전문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자신만의 스토리는 여러분의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지역 내 채용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입사 방안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중 가장 좋았던 것을 뽑자면 단연 지역까지 확대되는 채용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공동 채용설명회부터 학교로 찾아오는 채용설명회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에서도 다양한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채용설명회에서 직접 지역인재로 입사한 선배님들을 만나며 생생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소개하는 인재상과 업무, 지역인재 가산점 정보를 얻으며 나의 성향과 맞닿고 나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을 찾으며 주무부처가 같거나 기관의 성격이 비슷한 곳으로 그룹화했습니다. 그런 후 공공기관 입사의 꽃인 필기시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를 활용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대학에서 유명 강사를 초빙한 NCS 기반 필기시험 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특강에 적극 참여하며 NCS 기반의 필기시험 기초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공공기관 필기스터디를 모집해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점차 상향되는 문제 난이도를 고려해 NCS 유형과 유사한 PSAT\*으로 공부하며 실력을 향상시켰으며, 많은 문제를 풀기보단 단권화를 통해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매일 신문을 스크랩하며 사회·경제 전반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다방면의 시사상식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지역의 채용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취업 준비 자체로도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과거 지역 취업준비생으로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에게 지역 내 다양한 취업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해드립니다. 채용설명회와 지역대학을 통해 취득

하는 생생한 채용정보와 스터디를 통한 실력 향상은 공공기관 입사의 문을 조금 더 빨리 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미생에서 완생으로

저는 학부 생활에서 쌓은 대내외 경험, 그리고 첫 직장인 지역 산하기관에서의 지역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조각을 모아 저의 마지막 정착지인 창업진흥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역 토박이인 저의 강점을 살려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 자활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 사회적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뜻깊은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로서 지역 내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은 취업 이상의 또 다른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지역인재로 입사한 동기들이 지역에 정착해 곳곳의 맛집을 함께 다니고, 지역에 애정을 가지며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는 지역인재 정책이 젊은 인력을 유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책에 함께한다는 데서 작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취업 준비는 미래의 내 모습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은 곳에 지원하는 것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정해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쌓은 다양한 경험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시간을 밀거름 삼아, 훗날 완생으로서 더욱 도약하시길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PSAT: '공직적격성테스트'로 현재 5급 공무원 1차 시험으로 활용됨

# 한국남부발전 입사를 향한 걸음걸음



위다은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제1발전소 보일러부 직원

※ 이 글은 '2020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지역인재채용 부문 장려상 수상작을 전제한 것입니다.

## 첫걸음, 취업스터디

“그냥 올라와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 처음 공기업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나라고 그 말에 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사람이 많고 학생들, 특히 취업준비생이 많은 곳에서 하는 취업 준비가 더 수월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나에게 허락된 여윌돈과 시간을 썹하며 심사숙고했다. 서울은 고향도 아니고, 출신 대학이 있는 곳도 아닌 무연고 지역이었기에 소요되는 돈과 시간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마도 취업 성공 후 적어도 반년은 그 금액을 메꾸는 데 여념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 끝에 고향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취업스터디’ 멤버를 구하는 일이었다. 우리 지역 멤버를 구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유명 취업 사이트 세 군데에 멤버 모집 글을 장문으로 올려 두고, 인근 지역의 스터디 현황을 살펴보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지 가능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며칠 후 첫 스터디원과 만날 수 있었다. 다행히 나이가 비슷하고 관심 기업과 공부 방향이 비슷해 바로 스터디를 시작했다. 그 후 스터디원이 6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공기업 취업이 바늘구멍이러는데, 이렇게 겨우 얻은 멤버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성장해갈 수 있을지 걱정투성이였

다. “우리끼리 서로 잘 도와야 해. 우리 다 같이 원하는 기업이 들어가서 서로 취업 톡 쏘자.” 이 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 두 번째 걸음, 공부 또 공부

취업준비생들의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 NCS, 한국사, 전공 등 원하는 기업에 맞춘 공부.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지원자들에게 원하는 바가 다르다. 이는 곧 NCS, 전공시험 그리고 면접이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과서만 봤는데 만점 받았어요’ 하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다. 내가 입사한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자소서로 채용 인원의 30배수를 걸러낸 후 NCS, 전공, 한국사, 영어 과목을 시험 본다. 요즘은 한국사를 필수로 보는 추세이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다. 물론 두루두루 잘 준비하는 사람도 많지만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NCS는 IQ 테스트를 방불케 한다. 공부 방법을 많이 적고 싶지만 스스로 ‘NCS 하수’라고 생각하므로 생략하겠다. 한편, 많은 준비생이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주장하는 분야는 바로 ‘전공’이다. 방대한 범위 내에서 40~80문제수량이 출제되는 전공시험은 어디서 얼마만큼의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기계 전공이었기 때문에 기계기사 필기과목 중 중요한 공

식 등을 정리하고, 기계기사 10개년을 반복해서 풀었다. 암기과목도 생각보다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기출문제집도 반복을 거듭했다. 사실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실제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사는 황금알이라고 생각한다. 본 시험에서 10문제가 출제된다면 8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2문제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공기업 시험을 보고 한 문제 차이, 아니 1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소양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일거양득의 황금알처럼 느껴질 것이다.

원하는 기업의 필기시험을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풀었다. IQ 테스트라고 말한 것처럼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생각보다 많은 오답에 놀랄 수 있지만, 모의고사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극복해 보자.

### 세 번째 걸음, 필기시험

그러다 보면 필기시험 날짜가 코앞에 다가온다. 사전에 모집공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시험시간과 시험문제 수를 파악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깜짝파티는 사람을 설레게 만들지만 시험장에서 설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의 1교시는 NCS. 80문제에 70분가량이 주어졌으므로 속도감 있게 풀어야 했다. 난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답안지 마킹을 시작하면서 틀렸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어 그대로 제출했다. 쉬는 시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잘 본 것 같으며 재잘대는 동안 불안감이 엄습했다. 한껏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전공, 한국사, 영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한국사는 예상보다 더 어렵게 나왔다. 수험생 수준이 올라가서 그런지 매우 어려운 편이었다. 어려운 문제를 다 맞혔으면 그야말로 황금알이 되었을 텐데. 영어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대망의 전공. 사실 아직도 내가 전공에서 과락이 아니라 붙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겸손의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시험 종료 후 NCS를 보고 재잘대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무리를 이루던 인파가 아무 말도 없이 나간 걸 보면 모두 어려웠으리라. NCS도 실수가 많았는데 전공에 한국사까지 충격을 받고 나니 취업 준비를 최소 6개월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게 느껴졌다. 불안한 마음에 전공 기출문제집을 더 구입하고는 공부하기 싫어 집에 고이 모셔뒀다. 모두에게 어려웠었는지 운 좋게 필기시험 합격 통보를 받았다.

### 네 번째 걸음, 면접 준비는 철저하게

면접을 준비한다는 것은 합격의 문턱에 서 있다는 말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취업스터디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방에 있었다. 이곳에서 원하는 기업의 면접스터디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이었다. 또다시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왔다. 함께할 스터디원도 없이 오롯이 혼자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었다. 밀려오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정보를 조사하면서 버텼다. 회사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사보를 보기 시작했다. 언급되는 주제에 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사를 찾고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을 이어나갔다. 화력발전소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면접에서 '알은체'할 만한 아이템은 다 긁어모았다. 다른 면접자들도 이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면접스터디에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자료들을 체화해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렸다. 내가 이렇게나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나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두 번째 볼 때는 이해한 내용을 외우려고 했다. 이제 20% 정도는 기억에 남았다. 다음에는 마치 앞에 사람이 있는 듯이 설명해 보았다. 버벅거렸다. 내가 이렇게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설명의 과정을 몇 번 더 이어나가자 버벅거리지 않고 설명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게 몇 번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내용이 유기적으로 얽혀 나가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말하는 연습을 했다. 짧고 간결하게. 두괄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이어나갔다. 지루할 때는 엉뚱한 나만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미리 말해 두지만 이 해결방안을 면접에서 써먹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면접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길 추천한다.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이 나의 열정을 보여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 다섯 번째 걸음, 면접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면접장으로 갔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준비한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를 꺼내 보고 있었다. 마인드 컨트롤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첫 번째, PT면접.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준비한 것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유기적으로 엮어 본 것이 도움이 됐다. 주어진 자료에 내가 알고 있는 자료를 사이사이 끼워 넣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은 미래 전력회사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복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심심할 때 준비했던 엉뚱한 대답이 빛을 발했다. 면접을 이끌어 나갈 때 유재석 같은 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많이 준비해야 한다. 질문은 면접관 마음이니깐.

두 번째, 토론면접. 미리 시간을 정해 주고 자료를 나누어준다. 역시나 준비했던 내용보다 자세한 자료들이 있었고 잠시 주춤했지만 마인드맵처럼 토론에 꺼낼 수 있는 자료들을 키워드와 맥락을 생각해서 적어 두었다.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알은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너무 떠들어서 감점이 생겼을까 봐 걱정할 정도였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준비한 건 다 보여주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세 번째, 인성면접. 가장 인상에 남는 단계다. 마지막이라서 더 그랬겠지만 정말 인성에 관한 질문만 들었기 때문이다. 준비했

던 방향은 포부 등과 같은 질문이어서 버벅거리고 엉뚱한 대답을 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는 긴장이 풀려서 문을 쿵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다. 그때 들었던 절망감이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떨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내가 면접위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준비하자. 소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한 평범한 우리는 아는 만큼 자신감과 열정이 눈에 나타난다. 주변의 사람들만 봐도 그러한데 면접관이 보는 우리는 어떨까.

### 맺음말, 차분히 내딛는 한 걸음

사기업 최종면접을 본 경험이 있다. 최종면접에 4명이 올라왔고 2명이 선발되었다. 나는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대답도 잘한 것 같았는데. 그 답은 내게서 찾을 수 있었다. 진실성. 그것이 내게 없었다. 가고 싶은 대기업이기는 했으나 이유를 물으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실패 경험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실성을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다. 취업난이 심해져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한다. 우리에게 자신을 납득시킬 만한 이유가 필요하고 이는 곧 진실성으로 연결된다. 그 길의 첫걸음에 함께할 수 있길 소망해 본다.🍀



# 투명 페트병

## 별도 분리배출에 참여해주세요!

음료와 생수에  
사용되었던  
투명 페트병만  
담아주세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단독주택까지 확대시행 됩니다.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내용물 비우기



라벨 제거하기



피그러트려서 뚜껑 달기



투명페트병은 따로 분리배출하기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예정 (21.12.25~)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중 (20.12.25~)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미실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 부단한 개선 노력 필요한 공기업 거버넌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민주 정부는 대의정치, 대의행정에 기반한다. 이 원칙에서 본다면 공기업의 주인 문제, 즉 거버넌스는 선거로 구성되는 정부에 위임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 정책이 선출된 권력의 성격에 따라 방향성과 선택 내용의 진폭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공기업에 대한 거버넌스도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파(민주사회의 공당) 간의 정책 경쟁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 결국 선거 공약을 내걸고 그에 대한 유권자 선택을 받는다고 보면, 둘러 가진 하지만 거버넌스 문제에서도 국민의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는 측면이 중요하다. 유권자는 투표권이 있는 성인들이고 국민은 미성년자, 즉 미래 세대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차이 정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에서 선출 권력의 의지를 반영한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인 국민은 이를 수용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권리행사와 책임이 그렇게 정부에 귀속된다. 그럼에도 정책 입안자들이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한번 비춰보자. 국민연금에 수백 조원의 기금이 쌓여있다 보니 이걸 이렇게 저렇게 마구 쓰겠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 때면 국민연금 털어 쓰기가 경쟁적으로 빚어진다. '청년주택, 임대주택 짓는 데 동원하겠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쓰겠다' 정도는 양반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목표를 '공공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수익률 극대화로 보면서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국민연금이 기금으로 주식을 사들인 기업의 경영에 관여해야 한다며 '스튜어트십 코드' 등을 만들어 개입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에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인(가입자)도 적지 않다. 원론적으로는 2천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국대회라도 열어 의사결정을 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법규를 만들면서 개입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근본 문제가 공기업 거버넌스에 똑같이 적용된다. 한국의 공기업은 정부가 출자한 유형과 지자체에서 만든 유형이 있다. 국가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맡

는다. 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후자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기구다.

필자는 이들 법에 따라 3년간 공공기관운영위원을 지내봤고,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도 2년 임기를 두 차례 해봤다. 경험에서 보면 공기업에 대한 거버넌스, 쉽게 말해 장악력 혹은 리더십 발휘는 기재부가 훨씬 강한 편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이 더 강력하다는 얘기인데, 지방공기업은 시·도·시·군·구라는 1차 감독기관이 있다는 것도 요인일 것이다.

국가 공기업도,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도 덩치와 하는 업무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다. 단일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좀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큰 숙제인 것도 그래서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기본 속성상 어떻게든 정부 통제를 덜 받으려 한다.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일부 기관들은 정부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기타공공기관'에 계속 남아있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아주 강하다. 반면 각 부처 산하에 편재된 특정 협회와 같은 작은 단체는 매년 한 차례씩 공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한쪽은 국책은행이지만 공공기관의 거버넌스가 은행 고유의 경영과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이고, 한쪽은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었든 당장 협회의 예산 지원받기, 대외적 평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게 낫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공기업의 거버넌스를 무작정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다. 법률로 세세한 기준을 모두 담지 못할 경우 먼저 우려되는 것은 작위적 행정이다. 거버넌스 문제에서는 공기업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조그마한 하자에도 잘 참지 못하는 성급한 대한민국 국민이 크나큰 변수다. 여론이나 국회, 정치권에서도 특하면 간섭을 요구하고, 작은 문제에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문화도 걸림돌이다. 이래저래 고민은 많으나 답은 어려운 게 문제다. 그렇다고 외면하면 공기업 선진화는 멀어진다.○



보조금, 찾아다니느라 힘드셨죠?

# 이제 찾지 말고 접속(OI)하세요!



내게 맞는 정부 혜택은 정부24에서 쉽고 편리하게

1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2



서비스 이용 동의 체크  
(최초 1회)



3



정부혜택  
확인·신청

#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접종부위 통증, 발적



두통



피로감



발열



오한



근육통



접종부위 부기·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전신 통증이나 발열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하세요.  
해열·진통제 복용에 제한은 없으나, 긴급적  
염증 제거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 바랍니다.

대부분 해열·진통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나,  
3일 이상 발열이나 근육통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만일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https://nip.kdca.go.kr/healthchecker>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하기  
<https://nip.kdca.go.kr/KVAERS>